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March
Vol. 39

3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March. 2020

VOL. 39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KPFIS 인사이드

-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심혜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성과 운영 현황
이현석 dBrain운영본부 차장 외

20 • 재정칼럼

- 스마트시대를 위한 바람직한 재정투자 방향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 국민의 생활안전과 재정의 역할
이종규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28 • 톺아보기

2020년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재정지원 방향



재정 NOW

- 30**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36**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42** • 키워드 재정
신종코로나
- 46** • 해외재정동향
EU의 경제전망과 재정 지속가능성



재정 STORY

- 50** • 이달의 재정 이야기
·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국고보조금 관리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금 제도 개선
- 56** • 재정 Talk Talk
예비비는 무엇인가?
- 58**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점묘파 그림에서 경제학자는 무엇을 보는가?
- 62** • 경제철학 이야기
진화사상의 개척자, 데이비드 흄
- 66** • KPFIS의 서재
- 68** • 재정 캘린더
- 70**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KPFIS-인사이트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최근 재정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 집행계획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집행상황을 더 이른 시기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집행 관리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주요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재정집행 관리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집행 특성에 따라 조기집행형, 집행부진형, 상/하반기 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_____ 개요

재정집행 관리란 정부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 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매월 경과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제출된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한다¹. 그리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².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주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 및 독려하고,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 실적을 점검한다³. 상반기에는 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점검대상을 일자리, 복지 등 민생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사업들 위주로 선정하고 일부 부진사업은 부처 자체 특별점검 및 현장점검 반 운영 등을 통해 부진 해소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조기집행 달성에 힘쓰며,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점검체제로 전환하여 각 부처·기관별 자체 특별점검단 운영, 부처합동 현장점검 등으로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 특별 관리 및 집행 애로 요인 해소를 통해 연말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이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매월 경과 후(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집행보고서에는 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②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 ③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 실적 및 대응 실적(시정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포함), ④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는 2001년 7월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재정집행점검을 실시하였고,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동 규정을 근거로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하였으며, 2009년 1월에 금융위기를 맞아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 6월 재정관리점검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재정관리점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각 부처 1급 공무원 및 공기업 부사장이 맡고 있다.

3 주요 관리대상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일반회계+특별회계),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를 말한다. 소관별로는 주로 부·처·청의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이, 기금별로는 주로 사업성기금 사업이 해당된다. 사회보험성기금 중에서는 고용보험기금만 포함되며 계정성기금과 금융성기금은 제외된다. 비목별로는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 등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되어 있다. 2019년 기준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규모는 291.9조원이다. 이 중 중앙부처의 예산 및 기금 규모가 252.6조원으로 총지출 규모(469.6조원) 대비 53.8%, 전체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86.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이 39.3조원으로 나머지 13.5%이다. 2019년 12월 말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총 집행실적은 301.6조원으로, 연간계획(291.9조원) 대비 103.3%를 집행하였다.

2 재정부 관리 현황

올해 정부는 첫 회의를 예년보다 빠른 연초부터 개최하는 등 재정 집행계획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집행상황을 더 이른 시기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르면, 집행관리대상 규모는 총 554.5조원(잠정)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도 전년 대비 1%p 이상 상향하여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대비 62.0%, 지방재정은 60.0%, 지방교육재정은 63.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기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일자리, SOC 등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조기집행에 대해 특히 강도 높게 추진하며, 개정된 연금 3법에 따라 확대·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적기에 집행되는 등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표 1.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연간계획(A) (잠정)	1분기 계획		상반기 계획	
		금액(B)	집행률(B/A)	금액(C)	집행률(C/A)
합계	554.5	162.8	-	339.4	-
중앙재정	305.5	97.6	32.0	189.3	62.0
지방재정	228.4	58.6	27.0	137.1	60.0
지방교육재정	20.6	6.6	32.0	13.0	63.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1.10.)

과거 6년간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249.4조원으로 총지출 규모의 70% 수준이었으며 이후 2016년 재량지출의 비중 감소 등으로 관리대상 범위가 조정되면서 감소하여 2019년에는 총지출 대비 54% 수준(252.6조원)에 해당하였다. 이들 사업의 연간계획 금액 대비 집행률은 2014년 97.2%에서 2019년 100.5%로 대체로 양호해지는 추세이다.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2014년 97.2%에서 2019년 99.2%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기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이 다소 변동이 있는 편이긴 하나 과거에 비해서는 대체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2018년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이·전용 등 증감액) 규모를 기준으로 집행률의 월별 패턴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상반기 집행률은 60% 내외 수준으로 연말 집행률이 낮았던 2013년과 2015년은 상반기 집행률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16년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

편, 2018년 기준 월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비율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초에는 분야별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며 다양한 수준의 비율을 보이다 연말로 갈수록 대체로 평균에 수렴해가는 모습으로 상반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각각 계획 대비 가장 높은 비율과 가장 낮은 비율의 집행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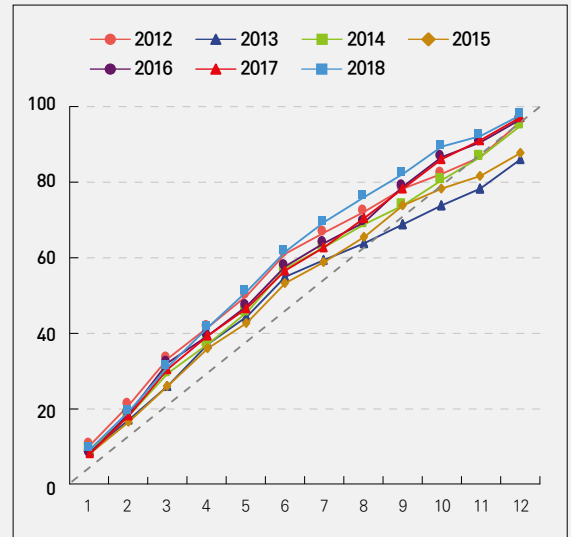
3 —————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

본고에서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현황을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월별 집행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조기집행형, 집행부진형, 상/하반기 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기집행형

상반기에 계획 대비 집행실적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업들을 조기집행형 사업으로 분류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38.5%에 해당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업들의 예산현액 규모는 전체의 75.5%에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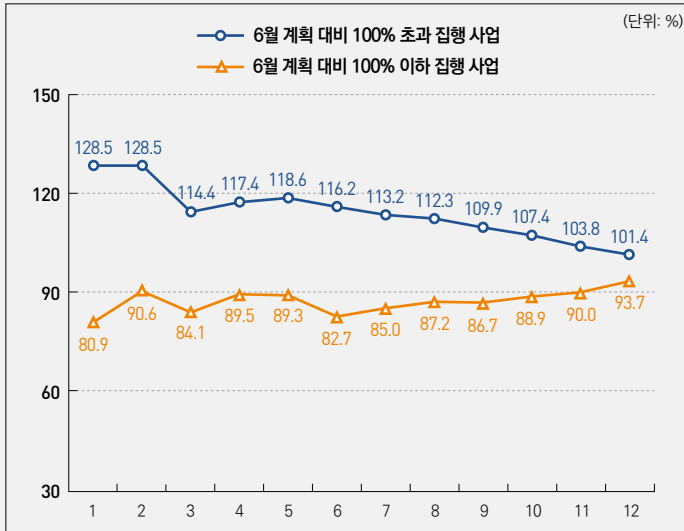
그림 1.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월별 집행률 추이 (단위: %)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규모 대비 집행실적 비율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2. 조기집행형 사업의 월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비율 추이(2018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당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들의 조기집행 확률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조기집행형 사업의 6월 계획 대비 집행실적 비율은 대체로 110%대 중반으로 나타나, 80%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는 나머지 사업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월별 집행률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조기집행형 사업은 하반기에도 비슷한 속도로 집행률이 상승한 반면, 그 밖의 사업들은 11월까지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로 상승하다 12월이 되어서야 평균 집행률 수준에 근접하여 차이가 있다. 이러한 조기집행형 사업에는 주로 사회복지, 농림수산, 과학기술, 교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자치단체이전, 연구개발출연금의 비목 비중이 큰 사업들이 많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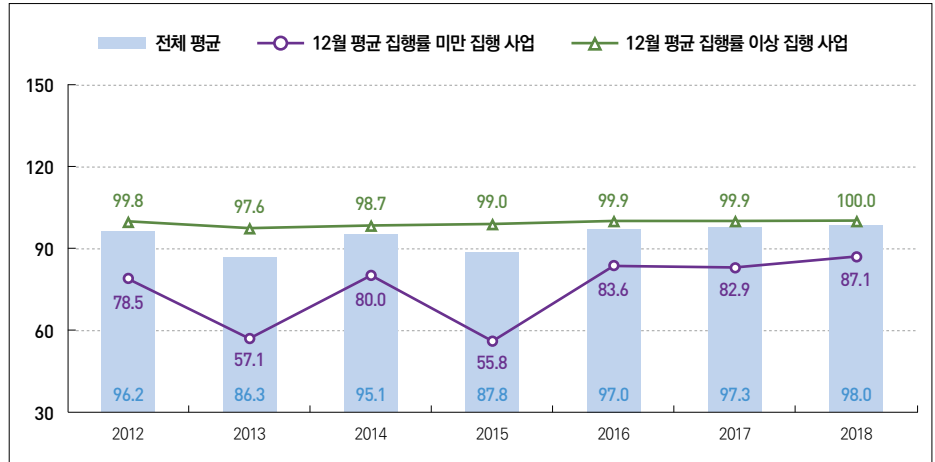
집행부진형

연말까지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집행부진형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말 집행률이 평균 집행률 수준 미만인 사업들을 분류하였다⁴. 그 결과 전체의 약 36%(예산 현액 기준 약 16%)의 사업들이 집행부진형에 해당하였다. 집행부진형 사업의 연말 집행률은 2013년과 2015년에는 50%대 수준으로 매우 부진하였고, 그 밖에는 대체로 80%대 전후 수준으로 다른 사업 집행률과의 격차가 크고 변동폭도 심했다. 월별 집행률 추이를 보면, 집행부진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며 3월, 6월, 12월을 중심으로 천천히 증가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업 집행률과의 차이는 하반기 이후 더 증가하여 10월에는 28%p까지 벌어졌다 이후 줄어드는 모습이다. 집행부진형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 부문, 교통 및 물류 분야의 항공·공항, 철도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전력유지 부문의 사업들이 해당하였다.

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12월 평균 집행률은 순서대로 94.1%, 74.0%, 93.6%, 73.1%, 94.9%, 96.1%, 96.9%이다.

그림 3. 집행부진형 사업의 연말 집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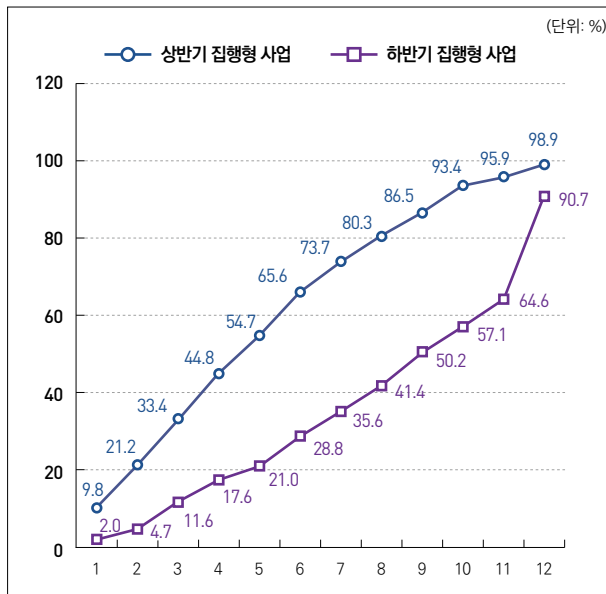
(단위: %)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규모 대비 집행실적 비율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4. 상/하반기 집행형 사업의 월별 집행률 추이(2018년)

(단위: %)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규모 대비 집행실적 비율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하반기 집행형

2018년 세부사업 기준으로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 집행실적의 규모를 기준으로 상반기 집행형 사업과 하반기 집행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반기에 더 큰 규모로 집행하는 상반기 집행형 사업의 비중이 약 65%(예산현액 기준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그룹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집행률은 상반기와 연말 시점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약 32%(예산현액 기준 11%)를 차지하는 하반기 집행형 사업은 연말에 가까워져서야 집행률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이 그룹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집행실적이 11월까지도 전체 집행률에 많이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행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자치단체이전 비중이 큰 교육, 일반·지방행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많았으며, 하반기 집행형 사업은 건설비, 건설보상비 등의 비중이 큰 국방, 교통 및 물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중 균등집행형

각 분기별 집행률이 전체 100%의 1/4, 2/4, 3/4, 4/4 수준 $\pm 50\%$ 편차 범위 내에 유지하는 사업을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⁵.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은 전체의 약 8%였는데, 이 사업들의 예산현액 규모는 약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이 해당함을 보여준다.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은 12월을 제외하고는 월별로 거의 일정한 기율기로 상승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그 외 사업들과는 집행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자치단체이전 비중이 매우 큰 교육, 일반·지방행정, 사회복지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표적으로 자치단체교부금, 의료급여경상보조, 그 밖에 보육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들이 해당하였다.

일회성 집행형

일 년에 집행을 단 한 번 하는 일회성 집행형 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약 8%로 예산현액 규모는 1.2%에 불과하였다. 일회성 집행은 1월~3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12월에 집행하는 사업이 약 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집행 월별로 일회성 집행을 한 사업들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1분기(1월~3월)에 일회성 집행을 한 사업들은 과학기술, 교육, 교통 및 물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 분야의 연구개발출연금 및 일반출연금 비중이 큰 사업들이 해당된다. 반면, 4분기(10월~12월) 중 집행을 한 사업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국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 분야의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유형자산, 지분취득비, 출자금, 민간이전 등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⁵ 각 세부사업단위에 대하여 '12.5%<3월 집행률≤37.5%', '37.5%<6월 집행률≤62.5%', '62.5%<9월 집행률≤87.5%', '12월 집행률>87.5%'를 모두 만족시키는 사업을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4 시사점

재정의 규모와 역할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계획 대비 집행실적 비율이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비율 모두 대체로 양호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정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집행 특성에 따라 조기집행형, 집행부진형, 상/하반기 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교부세 및 교부금, 의료급여경상보조, 주거 관련 지원, 양육·보육·교육 지원, 창·취업 지원 등의 주요 민생안정 사업들이 상반기 위주로 연중 균등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며, 대체로 상반기 계획 규모를 초과하여 집행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를 견인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사업의 비목 구성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이 대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실집행에 대한 부분은 측정이 어렵고 관리에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집행이란 중앙정부가 지자체, 출연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이후 교부 받은 기관이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지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집행 관리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 교통 및 물류 분야의 항공·공항, 철도,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전력유지 부문 등 SOC 사업 및 군시설 건설, 장비획득 사업의 경우 12월에 임박해서 집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연말까지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패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관리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이러한 주요 사업들의 집행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02

KPFIS-인사이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성과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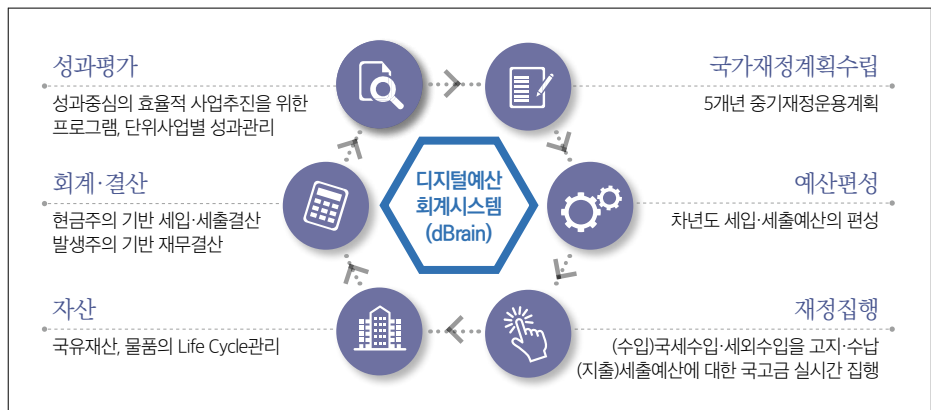
이현석 dBrain운영본부 차장 외(hslee16@kpfis.or.kr)

1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의 재정제도 개혁을 담아 구축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¹은 2007년 개통 후 현재까지 운영 14년차를 맞아 재정업무의 투명성 향상과 재정업무 처리 효율성 측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현재 2022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dBrain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dBrain 시스템 기능과 운영 현황을 되돌아보고 덧붙여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활동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dBrain 개요

그림 1. dBrain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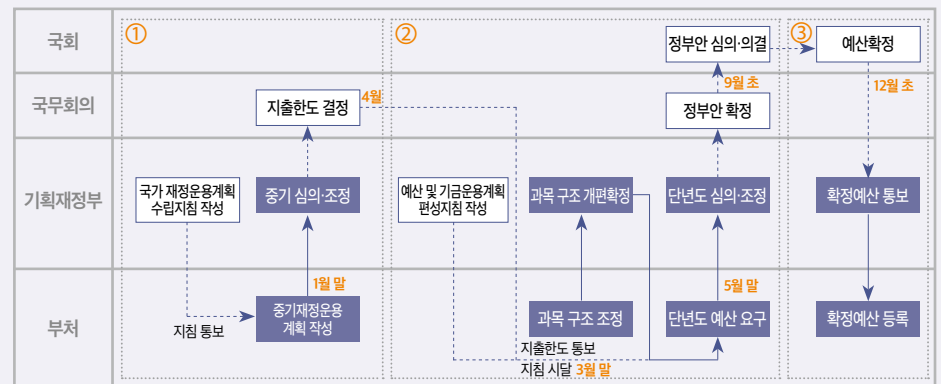
- 사용자: 67,850명(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연계기관: 48개 기관 82개 시스템(한국은행, 경찰청, 국세청, 조달청 등)

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dBrain" 약칭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 지능적으로 통합재정관리를 수행한다는 의미의 "digital Brain"의 약어이다.

구분	일일 업무 처리량				시스템 규모	
	사용자 수	업무처리 건수	국고이체 금액	국고수납 금액	연계기관	연계시스템
2007년	11,998명	23만건	3.0조원	6,000억원	22개	40개
2019년	14,106명	52만건	9.7조원	6조원	48개	82개

① 국가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스템

그림 2. 예산편성시스템의 주요 업무 흐름



- ※ 코로나19 등과 같이 국
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
득이하게 필요하고 불
가결한 경비가 발생했
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표 2. 2020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률
총지출	469.6	512.3	9.1
1. 보건·복지·고용	161.0	180.5	12.1
2. 교육	70.6	72.6	2.8
3. 문화·체육·관광	7.2	8.0	10.6
4. 환경	7.4	9.0	21.8
5. R&D	20.5	24.2	18.0
6. 산업·중소·에너지	18.8	23.7	26.4
7. SOC	19.8	23.2	17.6
8. 농림·수산·식품	20.0	21.5	7.4
9. 국방	46.7	50.2	7.4
10. 외교·통일	5.1	5.5	8.8
11. 공공질서·안전	20.1	20.8	3.5
12. 일반·지방행정	76.6	79.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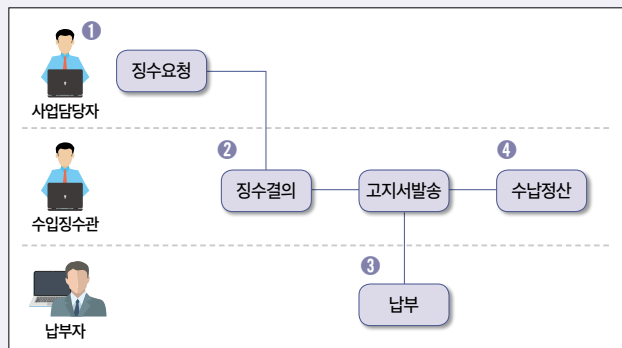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0년 나라살림 예산개요」(pp.107)

② 재정집행시스템

(1) 수입관리

수입은 국세의 고지 및 수납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대량징수기관(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과 금융망(금융결제원, 한국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수입을 총괄 관리한다.

그림 3. 수입 업무 흐름



- ① 사업담당자는 법령·계약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수행한다.
- ② 수입징수관은 징수 요청된 내역에 따라 징수결의 승인 후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 ③ 납부자는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창구·ATM 등을 통해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 ④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의 수납정보와 한국은행의 국고금 입금정보를 확인하고 수납정산을 수행한다.

이렇게 재정집행시스템 내 수입관리는 납부 건수와 금액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여 국세수입 금액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402.0조원으로

전년 대비 17.0조원 증가, 예산 대비 2.1조원 감소, 2019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5조원으로 예산 대비 1.3조원 감소하였다.

표 3. 2019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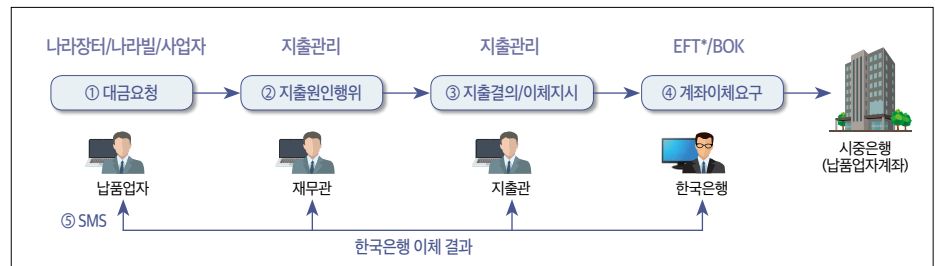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전년동기 대비 증감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합계	371.2	385.0	404.1	402.0	32.9	17.0
국세수입	268.1	293.6	294.8	293.5	26.7	△0.1
세외수입	103.1	91.4	109.3	108.5	6.2	17.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2) 지출관리

지출은 배정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국고금을 실시간으로 집행하는 업무이며 예산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급수단으로 실시간 전자자금이체를 사용한다.

그림 4. 지출의 전자자금이체 절차



주: EFT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으로 Electronic Fund Transfer의 약자

- ① 대금요청: 납품업자는 조달청 나라장터나 금융결제원 나라빌(온라인대금청구)을 통해 부처 사업담당자에게 대금 청구를 요청
- ② 지출원인행위: 정부의 예산담당인 재무관은 예산 배정한도 내에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수행
- ③ 지출결의/이체지시: 지출담당자는 계획된 자금한도 내에서 지출결의 후 이체를 요청
- ④ 계좌이체요구: 이체 요청은 EFT시스템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한국은행은 납품업자의 계좌가 개설된 시중은행으로 실시간 입금
- ⑤ SMS전송: 입금이 완료되면 납품업자에게 SMS를 통해 입금내역 통보

이처럼 공무원과 민간업체의 대면 없이 대금청구부터 자금이체까지 국고금 지출 전 과정의 전산화는 국고금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가능하게하고, 국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2019회계연도 총세출은 예산현액 407.8조원 중 397.3조원을 집행(97.4%)하였고, 전년 대비 32.8조원이 증가하였다.

표 4. 2019회계연도 총세출 현황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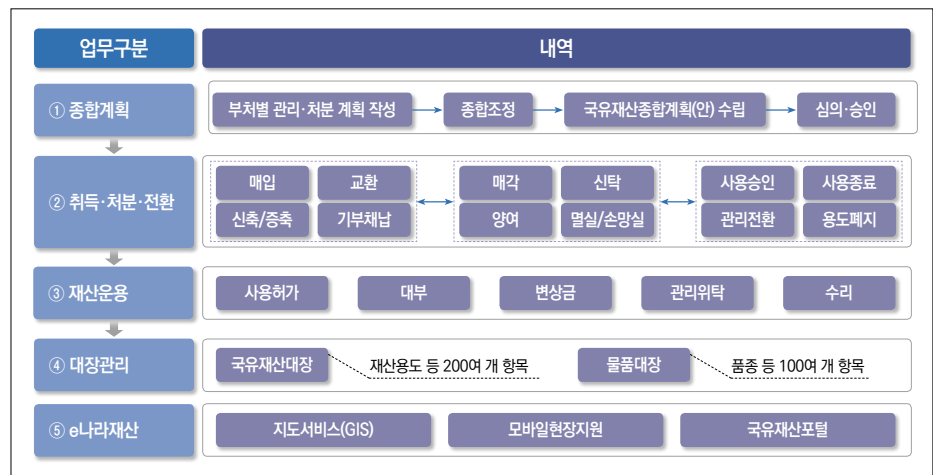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등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404.1	3.3	0.4	407.8	397.3	97.4
일반회계	334.7	1.6	0.02	336.3	330.9	98.4
특별회계	69.4	1.7	0.3	71.5	66.4	92.9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③ 자산시스템

자산은 국유재산·물품으로 구성되며 자산의 소유권 취득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 대장 마감까지의 자산의 전체 Life Cycle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림 5. 국유재산·물품 업무 흐름



- ① 종합계획은 매년 각 부처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조정하여 중장기적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② 취득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로 매입, 기부채납 등으로 구성된다. 처분은 국가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매각, 양여 등이 있다. 전환은 재산관리 주체를 변동하는 업무로 사용승인, 관리전환 등이 있다.
- ③ 재산운용은 재산을 유지·활용하는 업무로 사용허가, 대부, 수리 등이 있다.
- ④ 모든 정보항목은 국유재산대장, 물품대장에 기입되어 관리된다.
- ⑤ 국유재산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지도서비스(GIS), 모바일기기를 통한 업무처리, 국유재산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 서비스를 지원한다.

표 5. 2018년 국유재산·물품 현황

(단위: 억원)

국유재산	규모(구성비)		물품	규모(구성비)	
토지	4,677,016	(43.2%)	전기·통신기기	29,503	(23.7%)
건물	699,211	(6.5%)	사무용기기	18,820	(15.1%)
공작물	2,887,831	(26.7%)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23,689	(19.0%)
유가증권	2,418,389	(22.4%)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11,968	(9.6%)
기타	135,106	(1.2%)	기타	40,519	(32.6%)
계	10,817,553	(100.0%)	계	124,499	(100.0%)

주: 2018년 말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9), 「2018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018회계연도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유부동산 정보는 국유재산포털(www.k-pis.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이 매수·임대가 필요한 경우 재산담당자와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공매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매수·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회계·결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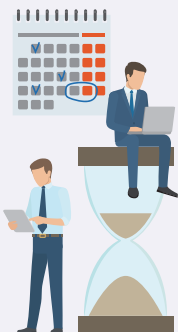
회계·결산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예·결산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결산을 관리한다. 국가결산서는 55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총세입·총세출 결산과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결산 등으로 구성되며, 결산의 의미는 한 회계연도 내에서 모든 세입(수입)과 세출(지출)을 숫자 형태로 표시하여 국민에게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정보를 다음 연도 예산과 연계하고, 국정시정요구 및 감사원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표 6.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조원)

구분	예산액 (a)	세입 (A)	세입초과액 (A-a)	세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불용액
합계	404.1	402.0	△2.1	397.3	4.7	2.6	2.1	7.9
일반회계	334.7	332.2	△2.4	330.9	1.4	1.3	0.1	4.1
특별회계	69.4	69.8	0.3	66.4	3.4	1.3	2.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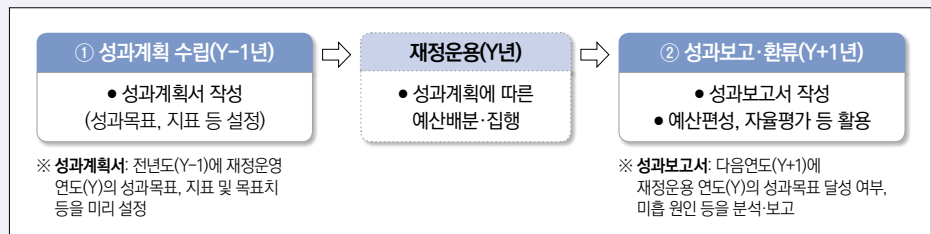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⑤ 성과평가시스템

성과평가는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성과계획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나타내는 성과보고서의 작성·검토·확정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그림 6. 재정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또한 각 중앙관서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구성서류로,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7. 최근 3년간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

년도	대상 기관	전략 목표	프로그램				단위사업			
			목표	지표	달성	달성률	과제	지표	달성	달성률
2018년	53	182	495	698	538	77.1	1,839	4,617	3,659	79.3
2017년	53	182	522	746	560	75.1	2,142	5,191	4,156	80.1
2016년	53	181	514	740	563	76.1	2,158	5,220	4,134	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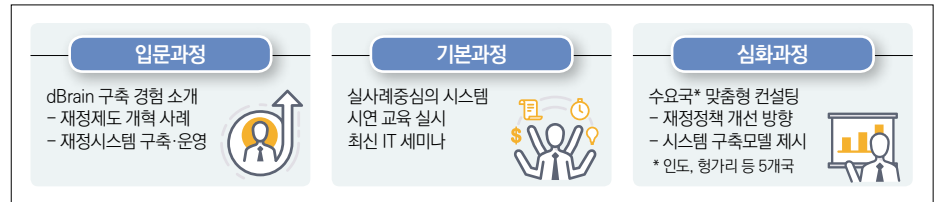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9),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4. 국제협력 노력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개원 이후 해외 재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dBrain의 구축 및 운영경험 전수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역량강화 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Program)을 ‘입문-기본-심화’과정으로 개편하여 수요국에게 연속성 있는 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수요국을 발굴하기 위해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등과 협업을 통해 수요국의 IT 환경 등 인프라, 재정시스템의 규모 및 제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7.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



5 ————— 맺음말

이상과 같이 dBrain 주요 시스템의 현황과 주요 통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통상 정보시스템이 구축 후 10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로 사용자들의 성능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의 기술로 만들어진 dBrain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래와 같은 불편 사항들이 접수되고 있으나 노후화로 인해 사용자 요구에 대한 눈높이를 맞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22년에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자연스레 아래의 불편들이 개선되고 더불어 dBrain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림 8. 現dBrain 주요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①

스마트시티를 위한 바람직한 재정투자 방향

황중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jshwang@nia.or.kr)



스마트시티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 관점이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스마트시티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 관점이다. 현재의 산업화 도시에서 한 단계 더 고도화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은 과거지향적 관점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거의 모든 스마트시티가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도시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데 집중했다.



한국 정부가 2018년부터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들은 미래지향적 관점을 견지한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구글이 캐나다 토론토에 구축하려는 사이드워크, 중국의 알리바바가 항저우에 만든 인공지능 도시가 있다. 한국이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과거지향적 접근으로는 도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솔루션은 미래에는 또 다른 도시 문제가 된다. 반면 도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꾸면 도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혹은 준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예컨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이런저런 해결책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동 필요성을 줄이면 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출퇴근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워크가 다양한 모습으로 도입되고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보다 엄밀히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부족한 부분을 도시가 보완하는 것이 스마트시티라고 해야 옳다. 로봇의 예를 들어 보자. 많은 도시들이 로봇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한 도시재난이 빈번하자 로봇을 활용하여 도시의 연속성(Continuity)을 확보하려 한다. 문제는 현재의 로봇 기술이 실제 도시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이를 도시가 보완해 줄 수 있다. 도시 구조와 시설물을 로봇 활용에 적합하게 변화시킨다면 많은 분야에서 지금이라도 로봇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 구현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강화하려 한다.

한국이 미래지향적이든 과거지향적이든 스마트시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한국의 민간 부문이 과감한 위험부담전략(Risk-taking Strategy)을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의 선두주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후발주자 전략을 취하면 위험성을 피할 수 있지만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는 못한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위험부담전략을 감수하고 스마트시티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노력한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그런 전략에 소극적이다. 기업의 체질도 문제이지만, 스마트시티와 같이 고도로 복잡하고 연결성이 강한 시스템 분야에서 경험도, 경쟁력도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초기 시행착오와 위험부담을 줄여줘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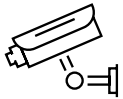
정부가 스마트시티에 투자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를 과거지향적 관점, 즉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발전전략으로 이해하면 지자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서울 등 소수의 지자체를 제외하면 스마트시티에 투자할 여력과 추진할 능력을 갖춘 지자체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스마트시티를 미래지향적 관점, 즉 미래 도시모델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조기 구현하려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이해하면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편으로 지자체의 취약한 추진역량을 보완하고, 다른 한편으로 스마트시티를 국가경제 고도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 투자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키텍처와 플랫폼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파킹, 스마트가로등, CCTV 같은 개별 솔루션을 따로따로 개발했고 그에 필요한 기반도 서비스별로 따로 마련했다. 그 결과 서비스와 솔루션의 숫자는 계속 늘어왔지만 이것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효과는 미미했다. 심한 경우에는 일종의 난개발 문제까지 불거졌다. 주차장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디지털 트윈이 프로젝트마다 다른 표준에 의해 개발되는 난개발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런 방법으로는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는 고사하고 과거지향적으로 현재의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한다.

아키텍처와 플랫폼의 힘을 활용하면 보다 적은 투자로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도 종합적인 아키텍



스마트시티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다. 그만큼 한국의 국가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경제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를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처가 있어야 각종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고 요소들 상호 간의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다. 개방형 아키텍처를 제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새로운 투자 없이도 기존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 한 예로 이미 도로에 설치된 CCTV만 활용해도 주차관리와 주차비 징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여러 서비스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비스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플랫폼을 먼저 만들면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를 도시마다 따로 만들면 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반면 시장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스마트시티를 표준기반에서 구현하면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보다 좋은 기술과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스마트시티에 대한 표준화 전략을 정립하지 못했다.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스마트시티를 국가발전전략에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직 표준화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다가온다. 중앙정부가 표준화된 아키텍처와 플랫폼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성과물이 표준화되어 다른 도시에 적용되게 하는 것까지 종합적인 표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다. 그만큼 한국의 국가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같은 다양한 도시재난이 이어지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를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쉽게 성공시킬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정부의 현명한 재정전략을 통해 지자체, 산업계, 학계가 적극적인 위험부담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다가온다.

②

국민의 생활안전과 재정의 역할

: 재난·안전 자원의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이동규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schema119@gmail.com)



서언: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

국민의 '생활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장애인·노인 관련 생활안전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고객중심의 생활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 기반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이 사업목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생활안전’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선정의 기준이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학술적으로 위기(Crisis), 보건(Health), 그리고 재난(Disasters) 관련 관리(Management)는 개인, 집단 또는 조직이 수행하는 ‘최초의 조치’이자 그 자체가 잠재적이고 명시적인 피해에 대한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이기 때문이다. 둘째, 안전(Safety)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그런 상태’이다. 어떠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활동에 의하여 위험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사고로부터의 ‘생활안전’과 재난으로부터의 ‘사회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안전’은 주로 사적인 관점에서 개인책임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고, ‘사회안전’은 주로 공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법규정들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양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제도가 크게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법제도에서는 사고와 재난, ‘생활안전’과 ‘사회안전’의 개념 구분은 모호하거나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고가 재난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고, 개인적 책임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생활안전 범위와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책임(안보, Security)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사회안전 범위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안전 관련 예산은 재난·안전 예산으로 포괄적(Comprehensive)이고, 관련 재정의 역할도 경제, 사회, 환경, 과학기술, 그리고 국가안보의 군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에 관련 예산·사업이 각 부처·지자체별로 중복성·유사성·대표성으로 산재되거나 혼재하는 것이다.

재난·안전 예산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세월호 사고 이후, 당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예산의 재정적 대표성, 전문성,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재정예산 사전협의권’을 부여하였다. 2014년 9월에 갑자기 제도가 도입되어 2015년부터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근거로 2016 및 2017 회계연도에 반영하였다. 오늘날에도 행정안전부 주도로 각 부처의 재난·안전예산 요구(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투자우선순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연계) 결과인 사전협의(안)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한다.

「재난안전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근거하면 ‘재난·안전사업’은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업이고, ‘재난·안전예산’은 재난·안전관리 ‘관련’ 예산이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재난·안전관리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기에 재난·안전의 ‘관련’이라는 모호한 기준만 충족되면 재난·안전 사업이자 예산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각 예산 소관 부처별로 그에 따른 세부 분류체계와 기준이 달랐고, 재난·안전 ‘관련’ 사업으로 고유성과 대표성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부처에서는 예산·사업에서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재난·안전관리로 포괄적이거나 모호하게 또는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업무관행이 나타났다. 이 두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사실 이 판단도 부처의 주관성이 반영되거나 고유 재량으로 간주되기 쉬움)하는 경우에 한해 재난·안전관리에서 재난관리를 제외한 부분을 ‘안전관리’ 영역으로 간주했다. 요약하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사전협의 대상으로만 재난·안전 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각 부처의 재난·안전 예산의 범위와 분류체계에 대한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고, 이는 신뢰성 관점에서 재난·안전예산 사업 선정 제도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재난·안전예산 사업의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개선방안

기획재정부의 예산 작성 편의를 위한 포괄범위·사업성질별 재난·안전 예산 분류체계는 직접적 재난·안전사업(S1)과 직·간접적 재난·안전사업(S2)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행정안전부는 ① 자연재난 유형, ② 사회재난과 안전사고 유형, ③ 재난·안전일반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하여, 피해유형별 재난·안전 예산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질적인 재난·안전 관련 예산 분류 체계를 통해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고, 재난·안전 관련 예산 선정의 명확한 기준 없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작성 편의와 행정안전부의 총액 예산배분의 편의성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강조하는 총액예산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취지와 행정안전부의 재난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취지가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처간의 형평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부처별로 안전 관련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난·안전의 특수한 취약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최근 3년 또는 5년의 연평균 피해 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배분 취지와 논리, 그리고 개별 부처의 안전 ‘관련’ 개별



법률 등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권’ 자체가 형평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경주 및 포항 지진과 메르스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례처럼 자연재난의 대주기가 존재하거나 신종 감염병의 출현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평균’으로 추정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이 현재의 재난·안전 사업선정이나 사전협의 방식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예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안전 예산관리를 총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국가 및 지자체의 재난·안전 예산 선정 기준 개발을 통해 재난·안전 예산 선정·재난·안전관리계획의 논리적 연계와 재난·안전 예산 투자 규모 및 세부분류 항목 분석·평가·환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재난·안전관리 예산 분류체계를 통합적으로 제시(기능 분류, 유형 분류, 단계 분류 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피해 파급력 관점에서 경제적 피해 규모와 재난 피해 원인 분석을 통한 정성적 평가와 연계하고, 잠재적 및 미래 위험에 대비한 가칭 ‘재난·안전미래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재원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예비비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교부세 지원 등의 예산-집행 여부-결산 규모를 분석하여,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시급성이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체계적인 예산투입-집행계획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툇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2020년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재정지원 방향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스마트 인프라 확충

- 적수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도입 **0.4**조원
- 스마트 시티 본격 추진 **0.3**조원
- 도로·철도 첨단 교통체계 구축 **0.4**조원



안전투자 인프라 확충

- 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국고지원 **0.6**조원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투자 확대 **2.6**조원
* 교통 안전강화, 산재방지, 자살예방
-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군(郡)에서 시(市) 지역 확대 **0.5**조원
- 해상 수색·구조 시스템 선진화 **0.3**조원



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

- 미세먼지 저감 투자 **4.0**조원
-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조성 **0.1**조원
-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 **270**억원
- 해양쓰레기 정화 등 청정바다 조성 지원 **441**억원



국민건강 증진투자 확대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9.0**조원
- 5대 건강 위험요인 예방·관리체계 구축 **0.6**조원
* 정신 질환, 자살, 마약, 감염병, 결핵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등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421**억원



국민생활 편의증진 스마트 인프라 확충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적수문제 근본적 해결

-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 기반
수질·수량 관리시스템 구축
(2022년까지 총사업비
1.4조원)



도로·철도 등 첨단 교통체계 구축

- 도로 ITS, 감응신호시스템,
터널 원격 제어 등 막힘없는
도로환경 조성(**2,236억원**)

*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기존 도로에 IoT 센서, 지능형
CCTV 등을 설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교통혼잡 개선
및 사고대응 강화



스마트 시티 본격 추진 등 미래 도시환경 구현

- 방법·교통 등 5대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지원(**816억원**)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부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712억원**)
-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운행을
기능화하는 챌린지 사업 확대
(**269억원**)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국고지원

- 노후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
안전투자 확대(**848억원**)
-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군(郡)에서 시(市) 지역 확대
(**4,680억원**)



대형·복합재난 대비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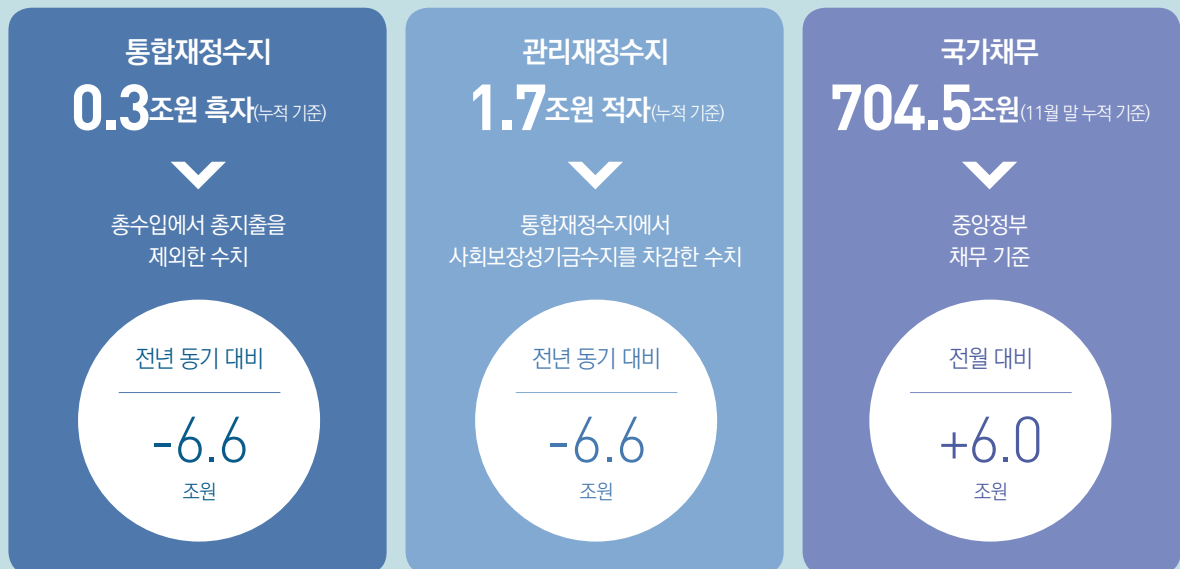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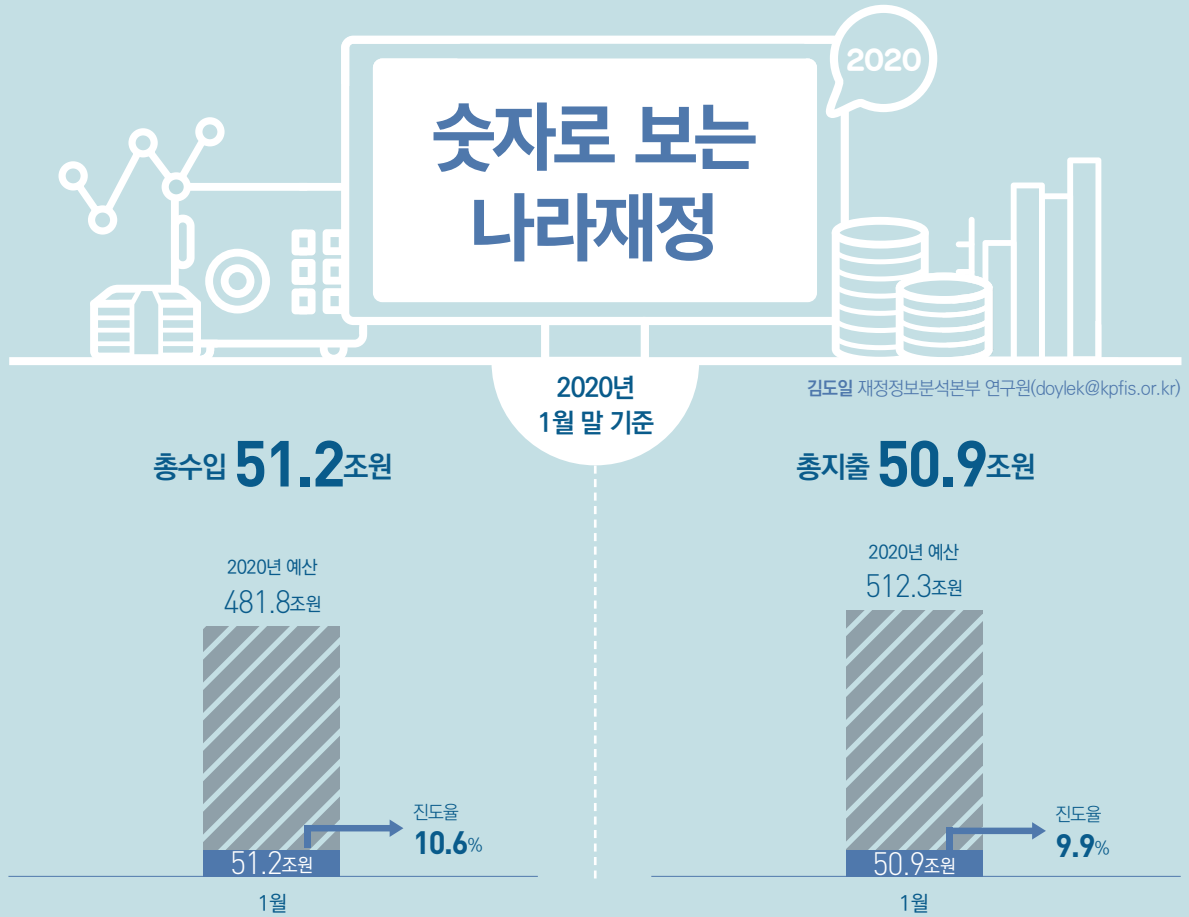
-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2배 인상
- 소방헬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보강
- 연안 초동 잠수요원 양성,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및
해경 대형헬기 보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투자 확대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
교차로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지역 교통안전 강화시설
대폭 확충(**1,100억원**)
- 산재 사망사고의 약 30%를
차지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확대(769억원→**1,002억원**)
-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례관리자'
대폭 확대





주 1) 2019년 12월 말 재정수지, 국가채무 실적치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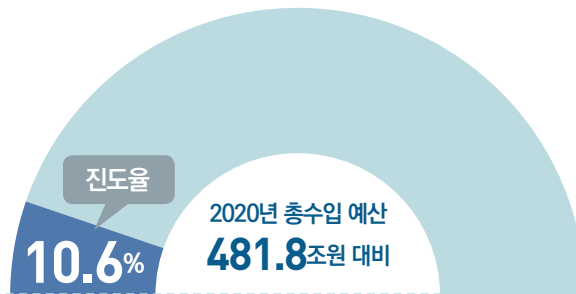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3.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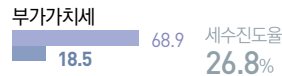
• 2020년 1월 말 기준

총수입
51.2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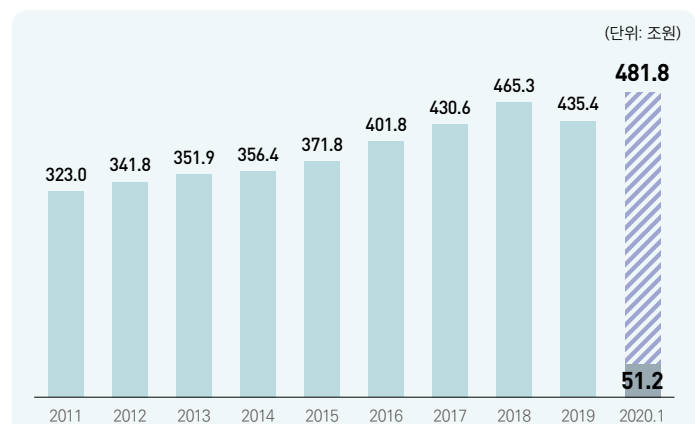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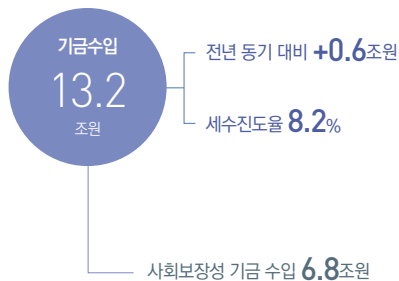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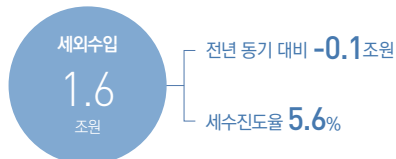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0.1
조원

주: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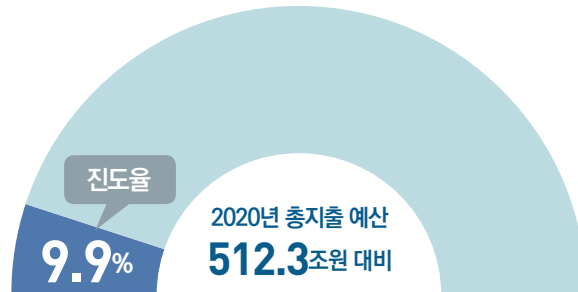
주: 2019년은 11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20년 1월 말 기준

총지출
50.9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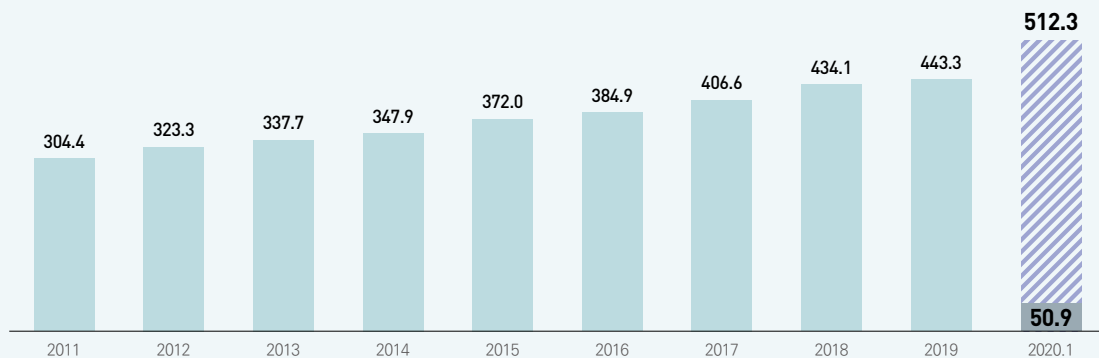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6.5
조원

주: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11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10.9%**



*2019년 이월예산은 미포함, 4월호에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정 예정

(단위: 조원, %)

	연간계획(A)	1월 실적(B)	집행률(B/A)
합 계	305.5	33.3	10.9
중앙부처	262.0	30.4	11.6
• 예산	211.5	26.9	12.7
• 기금	50.5	3.4	6.8
공공기관	43.5	2.9	6.7

2020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부처명	1월 실적	집행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28.4
2	보건복지부	5.2	25.2
3	해양수산부	0.9	21.4
4	고용노동부	0.7	17.0
5	외교부	0.1	13.5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0년 1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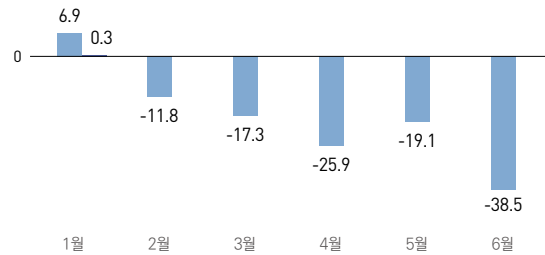
0.3조원 흑자

전년 동기 대비

-6.6

조원

■ 2019 ■ 2020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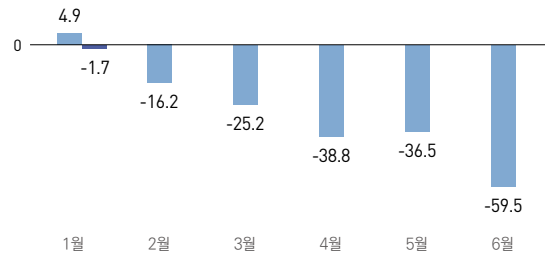
1.7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6.6

조원

■ 2019 ■ 202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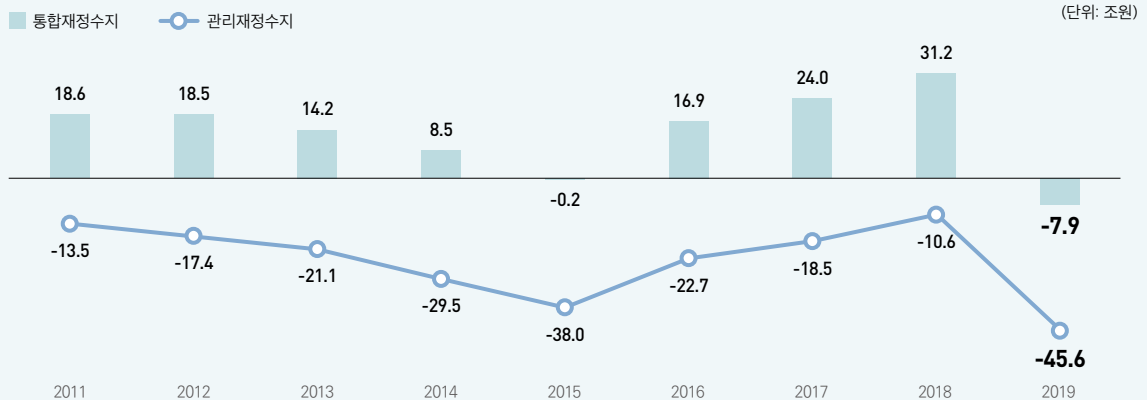
2.0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1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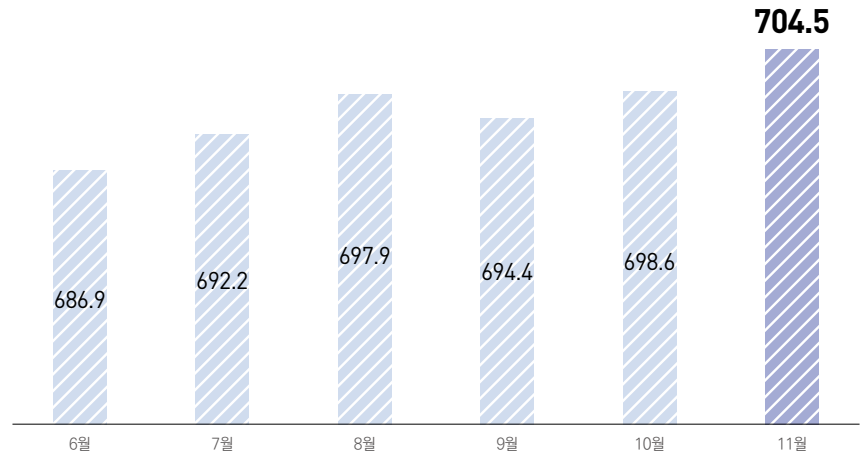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 가 채 무

• 2019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704.5조원



전월 대비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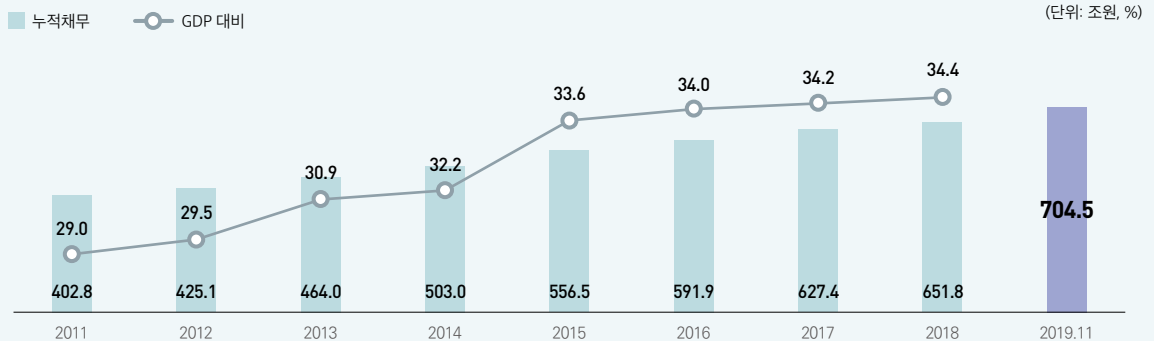
조원

전년 동기 대비

+52.8

조원

주: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반영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sjeon@kpfis.or.kr)

사업별 재정정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고령화,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영역의 사업별 재정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별 집행실적

재정통계 > 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 > 월별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 일별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



재정통계 > 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 > 월별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에서는 세부사업명을 입력하면, 2018년부터 2020년(1월)까지 월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부사업명에 '일자리'를 검색하면 일자리와 관련된 세부사업들(15개)이 검색이 되며 소관, 분야,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당월), 집행액(연누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또한, 밑줄이 그어진 세부사업명(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을 클릭하시면, 팝업창을 통해 세부사업정보가 나타나고 사업 코드 정보(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와 예산 총괄표(결산, 전년도 예산, 현재 예산, 증감률, 사업구조 변경여부 등) 등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세부사업 설명자료와 월별 집행실적을 제공합니다. 세부사업명을 선택하시면 사업별 설명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 완료시점에 대부분의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으로 집행실적액이 사업의 진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예산액, 집행액 정보는 잠정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설명자료는 각 부처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 * 월간 마감 관계로 매월 26일 이후 잔월 실적이 제공됩니다.

회계연월: 2020년 01 | 소관: 전체 | 회계: 전체
 분야: 전체 | 부문: 전체 | **세부사업: 일자리**
 항목: ☒ 소관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검색초기화 | **Q 검색**

(단위: 백만원) 액셀

회계연도	집행월	소관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2020	01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53,022
2020	01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164,716
2020	01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지원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일자리대행지원일자리안정자금지원	734
2020	01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지원	국가일자리정보통합 구축·운영(정보화)	일자리정보통합을기반한고용서비스지원(정보화)	9,177
2020	01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일자리위원회운영	일자리위원회운영	5,661
2020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본부 기본경비	중대대사과학기술일자리혁신과기본경비	66
2020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본부 기본경비	중대대사과학기술일자리혁신과기본경비	221
2020	0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관광	관광산업활성화	관광산업활성화지원	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및단정지원	10,966
2020	0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노인	노인생활안정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1,201,501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정보

※ 상세 설명자료는 원문보기 및 다운로드를 이용하세요.

원문보기

다운로드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고용노동부	지역지원계정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6	317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률	사업구조 변경여부
		본예산	추경 (수정지출계회 액)	본예산	추경 (수정지출계회 액)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0	0	0	153,022	153,022	-	N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을 클릭한 화면입니다.

2 사업설명자료 (원문보기)

재정통계 > 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 > 월별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 일별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



정부의 재정 사업 체계는 8,000여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열린재정」에서 이런 세부 사업설명자료를 검색/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원문보기를 클릭하면, 각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① 예산 총괄표(최근 결산액, 예산액 등), ② 사업 코드, ③ 사업 지원 형태, ④ 사업목적, ⑤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⑥ 주요내용, ⑦ 사업집행절차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관련 세부사업 중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사업설명서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에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수, 알선 등을 통해 해외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추진 경위 및 주요내용에서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에는 총 8,750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집행절차를 통해 크게 3가지(K-Move 스쿨,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정보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고령노동부, 계정: 080, 부과: 080

코드: 일반회계, 명칭: 고령노동부

원문보기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rrow)

사 업 명

(15) 해외취업지원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과
코드	일반회계	고령노동부	080	080	080
명칭	고령노동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지원율	지원율	지원율	지원율	지원율
구분	1000	1001	1002	1003	1004
명칭	고령노동부	고령노동부	고령노동부	고령노동부	고령노동부

3. 예산안 총괄표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A)	2017년 예산액(B)	증감	증감률(%)
해외취업지원	53,647	54,002	58,402	5,172	3.0

4. 사업목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수, 실업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7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정부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경제임,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국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제1항의 사업장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해외취업지원 등 고령노동부

① 「직업안정법」 제18조(무로직업소개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로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② 추진경위

- '98.3. "실업문제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공공해외 취업업무 체계 추진
- '99.10. 공공해외 취업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담당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 시달(국조실)
- '06.3.22 해외취업촉진을 위하여 해외취업연수사업 확대제로 결정 (제4차 일자리 만들기 당장공통특위)
- '08.3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 중점 과제제로 선정
- '08.4.2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종합계획 확정
- '10.6.8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실무협의회)
- '11.1.11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해외취업활성화 정부-민간 합동회의)
- '12.2.24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제11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13.3.29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추진(국정과제)
- '13.10.24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4.7.23. 교육부와 "세계로 프로젝트" 통합 MOU 체결('15년~)
- '14.11.21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5.11.27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6.12.14 "청년 해외취업 성과 및 계획" (경제관계장관회의)
- '18.3.15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발표(청년일자리대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98 ~ 계속
- 사업규모: '20년 8,750명(K-Move)를 3,550명, 해외취업성공자금 4,400명, 민간 해외취업알선지원금 800명)
- 사업시행방법: 출연, 보조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 사업 수혜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 보조, 출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출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를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인력공단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3 국민관심 사업정보

맞춤형정보 > 국민관심 사업정보 >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 국민 관심 키워드, 저출산·고령사회

맞춤형정보 > 국민관심 사업정보 >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 국민관심사업 월별집행실적 (사업설명자료)

「열린재정」의 맞춤형정보 > 국민관심 사업정보에서는 국가 재정사업에 중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들의 다양한 정보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제공합니다. 정책여론수렴시스템¹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과 '혁신성장으로 활력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재정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춤형정보 > 국민관심 사업정보 >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 국민 관심 키워드,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에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5년 구축된 시스템이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관심 사업정보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월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대폭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하나로 정부는 국민이 관심 있는 재정사업을 31개 선정하여, 자세한 사업설명과 함께 예산 편성·집행내역 등을 알기 쉽고 투명하게 개방하였다.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과 '혁신성장으로 활력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재정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생활안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육아·보육 및 노후 생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활력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소상공인과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으로 활력이 있는 대한민국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국민 관심 키워드, 저출산·고령사회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명에서 2067년 21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707만명에서 1천8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안어로 '인구절벽', '출산징려금', '복지' 등이 도출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육료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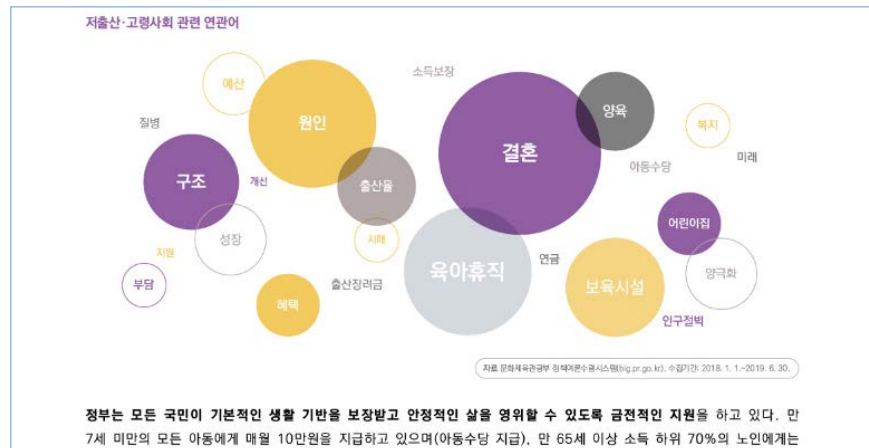
출생 및 고령인구 현황 (단위: 천명, %)



주 1) 합계인구 비율 2) 총인구계 기준 | 자료 출처: 「경제인구특별추진: 2017~2067년」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관심사업 월별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에서는 국민관심사업 중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콘텐츠에 선정된 17건의 세부사업과 함께 재정통계 > 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 > 월별집행실적(사업설명자료)에서 볼 수 있는 소관, 분야,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당월), 집행액(연누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별 재정정보 관련 기타 정보

사업별 재정정보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사업별 재정정보는 월별 집행실적이나 세부사업 사업설명자료 외에도 보도자료 검색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또는 추진 결과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창업’을 검색하면 청년창업공간, 청년창업기업,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등 총 53건의 창업 관련 정부 정책 보도자료를 검색,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총 53건

검색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국유지 개발하여 강남에 청년창업공간 조성		국유재산정책과	2019-10-01	12
김용현 1차관, 청년창업기업 ㈜루닛 방문		일자리경제정책과	2019-09-24	6
이호승 차관,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현장 간...		협동조합과	2019-06-19	13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신종코로나’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바이러스’, ‘감염’, ‘질병 관리본부’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신종코로나



연관어

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

감염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어린이집

국내

대응

감염증

여행

확진

현장

질병

신종코로나¹(이하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과(Coronaviridae)에 속하며 동물과 사람을 감염시켜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군이다. 코로나바이러스과에는 4개의 속(알파, 베타, 감마, 델타)이 있다. 이 중 알파 및 베타코로나바이러스군에 사람을 감염시키는 사람코로나바이러스(Human Coronavirus, HCoV)들이 속해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코로나바이러스는 사망률이 낮고 임상적으로 드문 질환으로 위험성²이 높지 않은 바이러스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베타코로나바이러스군 중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CoV, 사스), 중증호흡기증후군(MERS-CoV, 메르스) 등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출현하였고, 코로나19 또한 베타코로나바이러스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보건위원회가 우한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에 대해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전파경로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후 비말(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월 20일 해외유입된 확진환자를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⁴를 '관심⁵'에서 '주의⁶'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환자 감시체계 강화와 의심 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였다. 1월 27일, 정부는 국내에 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계⁷'단계를 발령하였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국내검역 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역량 제고를 통해 대응하였다.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심각⁸'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구·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각 시도별 감염전담병원 지정 등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⁹.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1,092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체계 가동을 지원하고 있다.

¹ 정식 영문 명칭은 COVID-19이며, 국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명명되었다.

² 사람코로나바이러스는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의해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³ 약학정보원 학술정보센터의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의 이해'를 참고하였다.

(http://www.health.kr/Menu.PharmReview/View.asp?PharmReview_IDX=4890)

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⁵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또는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단계를 의미하는데, 2020년 1월 8일에 발령했다.

⁶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단계를 의미한다.

⁷ 국내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및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단계를 의미한다.

⁸ 국내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전국적 확산,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단계를 의미한다.

⁹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출 항목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방역체계 고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¹⁰.

2020년도 감염병 관리 및 방역 관련 주요 사업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을 지원하고 있다. 감염병 관련 예산을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질병관리본부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은 7,094억원 규모이다. 질병관리본부지원 프로그램 중 감염병 관련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감염병 관리(218억원), 감염병 진단 인프라 구축(69억원), 감염병 표준실험실 관리(132억원),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438억원) 등이 있다.

▶ 감염병 관리

감염병의 2차 전파방지 및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감염병 관리 사업(111억원)으로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감염병 관리 사업은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39억원)은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업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감염병동 구축·운영을 통해 신속한 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시설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업으

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48억원)이 있다. 이를 위해, 신종감염병 긴급상황실 운영 및 유지,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사업(20억원)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에서 수행하는 신종감염병 예방·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 분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국제적 지원도 동시에 하고 있다.

▶ 감염병 진단 인프라 구축

감염병 진단 인프라 구축의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만성감염질환¹¹ 코호트 사업이 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54억원)은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 및 백신 기반기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지역거점에서 신속한 진단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사업(15억원)은 만성감염질환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만성감염·질환 예방 정책수립 및 평가, 치료 지침 및 교육자료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감염병 표준실험실 관리

국내외 감염병의 국가 최종검사, 항생제 내성정보 분석 등을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 사업(58억원)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한 통합적 관리로 감염병 표준실험실의 검사역량을 강화하며, 감염병 확산의 조기 방지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사업(56억원)은 병원체¹²의 연구를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건립을 통해 병원체자원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분량을 지원하고, 국가 병원체자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업(18억원)을 통해 열대풍토병¹³의 진단 및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기생충 질환을 포함한 세균, 바이러스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면역 관련 병원성 물질을 발굴 및 확보하고, 신속진단과 백신 개발에 활용 가능한 생물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지원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438억원)이 있다.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의 국가비축물자를 확보·관리하여 신종감염병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¹⁰ 정부는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20년 3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¹¹ B-C형 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의미한다.

¹²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로 보건의료의 연구·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¹³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등과 같은 적도 부근 열대 지방에서 물과 음식으로 감염되는 병이다.

영국의 EU 탈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등은 유럽 경제의 악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중남미의 사회적 불안 등은 2020년에도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2월에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European Economic Forecast」와 1월에 발표한 「Debt Sustainability Monitor」를 통해 EU의 경제전망과 EU 주요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or.kr)

EU의 경제전망과 재정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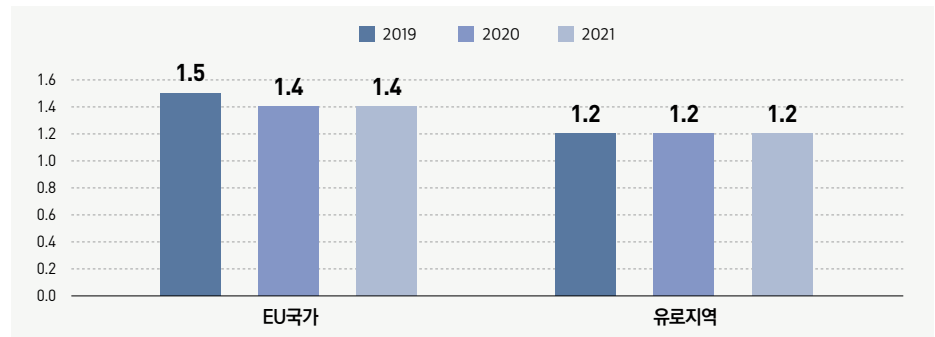


경제전망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0년 겨울 경제전망(「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0」)에서 2020년 EU 27개국의 경제성장률은 1.4%,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들의 성장률은 1.2%로 유럽 경제가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치는 직전 경제전망인 2019 가을 전망과 동일하다.

그림 1. EU국가 및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EU Commission(2020), 「European Economic Forecast-Winter 2020(Interim)」

미중 무역분쟁,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금리에 따른 건설 부문의 반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추진, 실질 소득 증대 등을 기반으로 유럽 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기조하에 2020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일부 해소되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기업의 체감경기가 개선되기에는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도 2020년 연말까지는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인정하여 2020년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지만 EU와 영국 간 FTA 협상 난항에 따른 2020년 연말 이후의 EU와 영국 간 무역조건의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중남미 지역의 경제 회복에 장애 요소가 되는 정치·사회적 불안, 이란과 미국의 갈등 등은 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의 취약성 등과 함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한편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전염병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경제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제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평가하였다.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독일은 제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수출이 둔화하여 2019년 0.6%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2020년에는 세계 무역량이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이 예상되어 위축되었던 수출의 증가, 건설 및 민간소비의 지속적 증가, 제조업 분야의 고용률 감소를 상쇄하는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 등을 통해 2020년에는 1.1%의 경제성장

률이 전망된다. 다만 독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낮은 수요 등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노란 조끼 시위'로 일컬어지는 연금개혁에 대한 시위 등 일시적인 요인들로 2019년 경제성장률이 2018년 대비 0.5%p 감소한 1.2%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경제성장률 또한 1.1%로 전망되어 성장률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 및 정부 투자의 감소, 지속되는 시위 등이 경제 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2018년 말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수습책으로 제시된 소득세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구매력 확충 정책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의 지속, 연금개혁 등에 대한 시위가 2020년 1분기 내에 소강상태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 안정적인 투자의 지속 등은 경제전망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 2019년에는 EU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대한 우려로 분기별 경제성장이 불안정하였으나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8년에 이어 1.3%로, 안정된 경제성장을 보였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된 2020년은 실질 임금 증가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1.2%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EU국가 및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국가명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명	2019년	2020년	2021년
벨기에	1.4	1.2	1.0	포르투갈	2.0	1.7	1.7
독일	0.6	1.1	1.1	슬로베니아	2.5	2.7	2.7
에스토니아	3.8	2.2	2.4	슬로바키아	2.3	2.2	2.6
아일랜드	5.7	3.6	3.2	핀란드	1.6	1.5	1.0
그리스	2.2	2.4	2.0	유로지역	1.2	1.2	1.2
스페인	2.0	1.6	1.5	불가리아	3.7	2.9	3.1
프랑스	1.2	1.1	1.2	체코	2.5	2.1	2.2
이탈리아	0.2	0.3	0.6	덴마크	2.1	1.5	1.5
키프로스	3.2	2.8	2.5	크로아티아	3.0	2.6	2.3
라트비아	2.1	2.3	2.4	헝가리	4.9	3.2	2.8
리투아니아	3.9	2.6	2.4	폴란드	4.0	3.3	3.3
룩셈부르크	2.7	2.7	2.6	루마니아	3.9	3.8	3.5
몰타	4.5	4.0	3.7	스웨덴	1.2	1.2	1.5
네덜란드	1.7	1.3	1.3	EU 전체	1.5	1.4	1.4
오스트리아	1.6	1.3	1.3				

자료: EU Commission(2020), 「European Economic Forecast-Winter 2020(Interim)」



재정 지속가능성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은 일반적으로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여부'를 의미한다. 즉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재정능력을 뜻한다. 재정 지속가능성은 신흥 개발도상국 등에 국한되어 중요한 개념이었으나 유

럽 재정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도 재정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기조하에 EU 집행위원회는 3년마다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해 EU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3년마다 평가한 결과는 매년 수정된다.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는 EU의 경제전망과 ‘고령화 보고서(Aging Report)’의 인구 전망을 토대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단기 평가에서는 재정스트레스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재정 위험요인과 금융 위험요인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중기 평가에서는 부채를 중심으로, 장기 평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무위험요인 등을 평가한다.

2019년 평가에서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지속가능성 위험요인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저금리로 인해 EU회원국의 채무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채무 감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채무 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권고하였다. EU회원국의 단기적 재정리스크는 낮은 수준이나 키프로스의 거시 재정 불균형,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등은 정부재정 상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국가는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기 재정평가에 있어서는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 높은 채무 수준이 우려되고 있으며, 핀란드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중기 재정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루마니아는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며, 이탈리아는 고금리로 인해 GDP 대비 채무 수준이 증가하여 재정리스크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영국과 포르투갈은 재정에 부정적 충격 발생시 민감도가 높아 재정리스크가 높게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장기 재정리스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벨기에와 영국은 고령화 비용의 증가, 룩셈부르크는 고령화 비용의 급속한 증가 이탈리아는 재정상황의 악화, 루마니아는 고령화 비용, 채무 지속가능성의 낮은 평가 등으로 장기적으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 국가별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중위험  고위험	
단기	-	-
중기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영국
장기	체코,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영국

자료: EU Commission(2020), 「European Economic Forecast-Winter 2020(Interim)」

국가재정은 직접 지출 외에도 보조금, 융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며,
수입의 경우에도 각종 세금과 함께 부담금, 벌금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두어 집니다.

이번호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조금의 관리와 부담금의 운용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만나 보았습니다.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국고보조금 관리

국고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책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된다. 국고보조금(이하 보조금) 규모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김영웅 사무관을 만나 보조금의 특징과 부정수급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다.

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보조금 관리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김영웅 사무관은 보조금 평가, 부정수급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수행하는 특정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다르게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출연금이나 출자금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향후 보조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관련 제도 및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도에 보조금관리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보조사업의 평가결과나 보조금법령 개정, 부정수급 대책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복지부, 농림부 등 보조금 규모가 큰 12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학계, 연구원 등의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운영 주기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논의 할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개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년 약 5~6회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2019년 12월에 개최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논의하였고,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행계획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2014년 부정수급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Interview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김영웅
사무관





재정 누수 방지 및 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추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당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019년 국고보조금 규모는 80.3조원으로 복지, 고용지출 확대에 따라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이 늘어난 만큼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부정수급이란 의도적인 기망이나 사기 등을 통해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기·횡령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어 범죄가 드러나는 반면에 부정수급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적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관행 정도로 인식하여 ‘숨은 범죄’의 특성을 갖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2019년 10월에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은 ‘부정수급은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정부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민생분야 ‘생활적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수급 대책으로는 첫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연동 무작위 불시 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원칙적으로 신고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정부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민생분야 ‘생활적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지급하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셋째, 고의로 인한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부정수급자를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공적정보를 확대해가면 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그저 잘못된 관행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이 정당한 대상자에게 잘 전달되어 재정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웅 사무관은 부처별 보조금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보조금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며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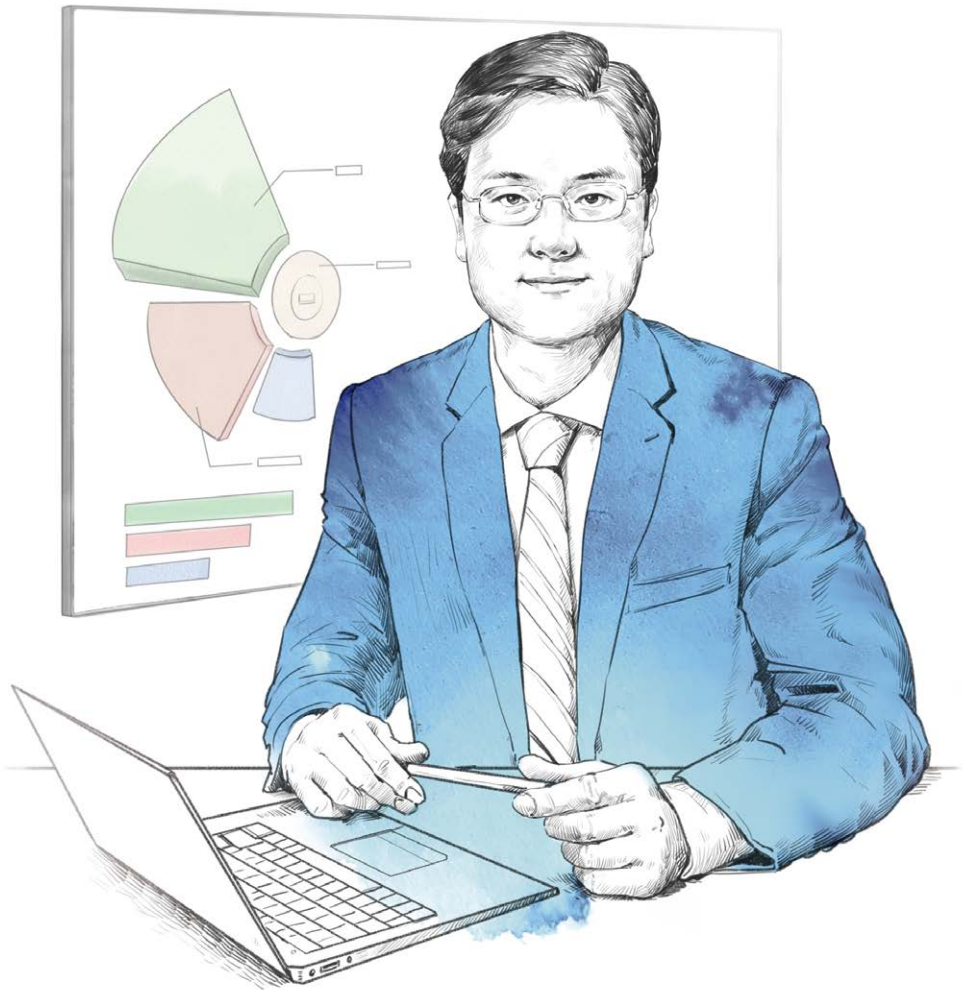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금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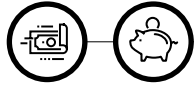
Interview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박 현 석
사무관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부담금이란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공공기관 등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대상과 특정 공익사업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담금은 종종 조세와 비교가 되는데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박현석 사무관을 만나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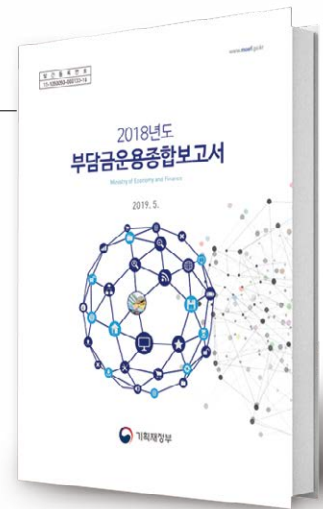
비슷하지만 다른 조세와 부담금

박현석 사무관은 2006년 재정경제부(2008년 기획재정부로 조직개편)에 임용된 이후 15년째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세법」, 「국가계약법」, 「민간투자법」 등의 입안 및 해석과 제도운동을 담당해왔다. 현재는 부담금 제도를 담당하며 부담금 제도의 개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부담금 평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담금은 종종 조세와 비교가 되는데,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인 징수를 하는 재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조세와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첫째,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에 조세는 납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조세 중에서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이 같지만,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개인에 대해서도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점



부담금 제도는 제가 그동안 담당했던 세법, 국가계약법, 민간투자법에 비해 시장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부담금 개선방향 등 부담금에 관한 정책을 폭넓게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위원회 안건으로 부처진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이 됩니다. 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2019년에는 총 6회 개최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2019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

의위원회는 12월 24일에 개최되었으며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안)」,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안)」,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변경(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8년 부담금 징수 규모가 20.9조원(부담금 수 90개)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취합하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부담금 제도는 90개 개별 부담금의 근거법령을 해당 부담금의 소관부처인 18개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부처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각 부담금별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계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12월에서야 대책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부담금 제도는 제가 그동안 담당했던 「세법」, 「국가계약법」, 「민간투자법」에 비해 시장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부담금 제도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담금은 우리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활동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항공권 티켓을 자세히 보면 국내공항을 통해 국외로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1만원)이 부과되어 있고, 관리비고지서를 보시면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90개 부담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므로, 부담금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림.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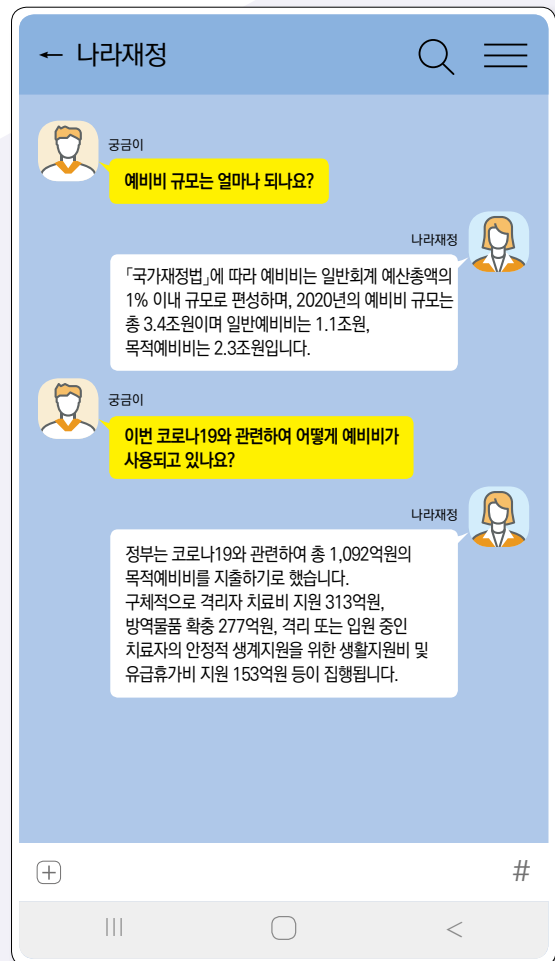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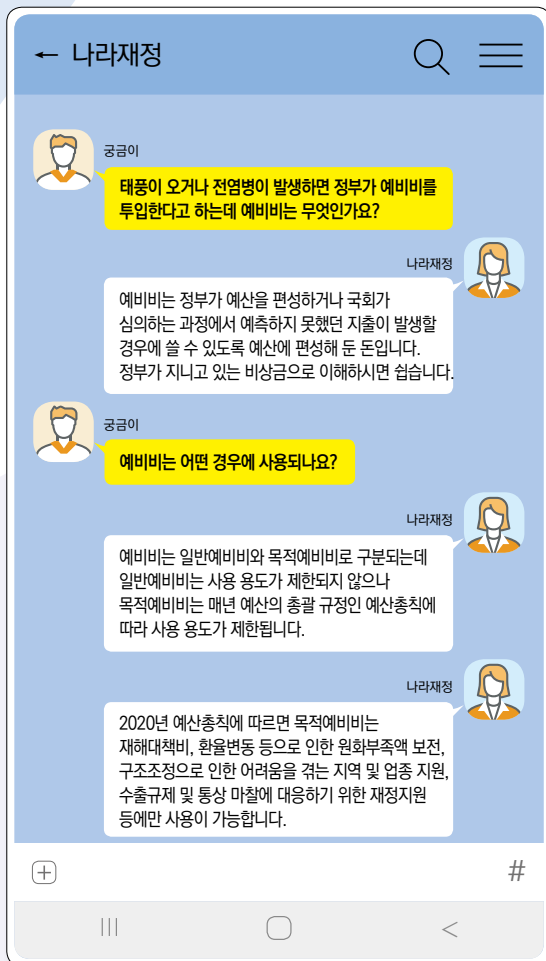
개 선 방 안	주 요 내 용
창업기업 부담금 지원제도 개선	① 창업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및 면제절차 간소화
부담금 운용합리화 및 규제 개선	① 소규모 공장 설립절차 개선 ②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담 완화 ③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합리화 ④ 공공계약 공사원가에 부담금 반영
중소기업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제도화	① 중소기업 대표자 정부위원회 위원 위촉 ② 중소기업 의견수렴 제도화

자료: 기획재정부

예비비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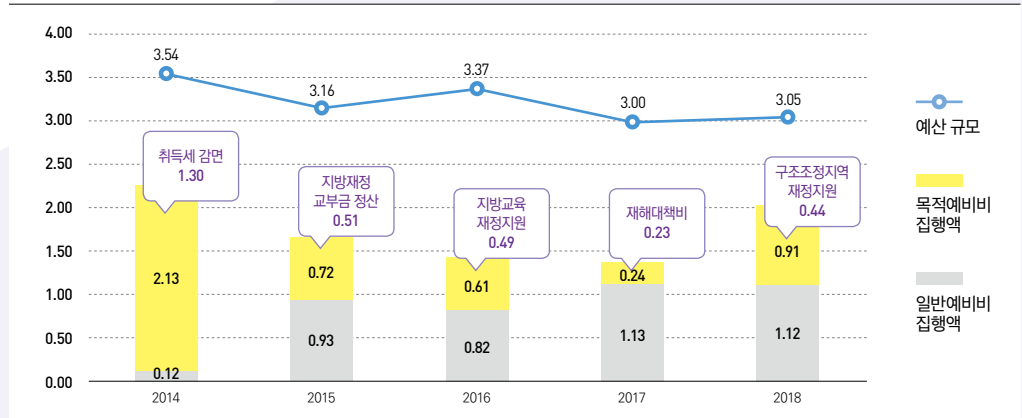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or.kr)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 및 지출 규모

(단위: 조원)



자료: 연도별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신혼부부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것은 '통장 쪼개기'로 일컬어지는 목적별 통장 관리입니다. 쓰는 목적에 따라 통장을 개설하여 지출 내역과 수입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원비 등의 지출에 대비하거나 큰 목돈이 필요한 여행비, 학자금 등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 통장과 같은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둔 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사업별로 사업 용도와 규모에 맞게 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동안 발생할 모든 재정소요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성질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일반예비비는 주로 새로운 정책수요,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에 활용되며, 목적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재해대책, 환차손 보전 등에 사용하며 목적예비비의 사용 용도는 예산총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총칙에 따르면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비,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외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및 업종 지원, 수출규제 및 국제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규모로 정하며, 2020년은 일반예비비 1.1조원, 목적예비비 2.3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라 정부도 신속히 예비비 1,092억원을 지출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격리자 치료비 지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격리 또는 입원중인 치료자의 안정적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등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점묘파 그림에서 경제학자는 무엇을 보는가?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George Seurat,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1884~1886, Oil on canvas, 308 x 207cm, Art Institute of Chicago



최근에 가장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슈는 대기업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현상일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 간에 한 쪽이 현격하게 권력이나 경제력을 일방적으로 소유하거나 행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이때 피해를 당하는 쪽이 이러한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다른 고용주를 찾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을의 입장에서 선택의 대안이 없을 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독점적 시장의 경우에도 독점기업의 횡포에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독점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는 시장에서 다른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이나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쟁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이런 독점력을 가질 수 없다.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다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적 시장 안에는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다. 만약 한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자.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들이 타사 제품의 가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다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기업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제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쟁적 시장에서는 한 개별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변경시킬 수 없다. 즉 시장지배력은 영(0)이다. 이런 시장을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보통 완전경쟁적 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이라고 부른다. 이런 시장은 물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 많은 가정의 기초 위에서 단순화된 시장의 틀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상화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각 기업은 다른 기업의 의사결정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각 기업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창시절 그림책에서만 보아왔던 점묘파의 그림을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발견하고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꼼꼼히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점묘파의 기법은 회화에 있어서도 아주 독특한 기법의 출현이자 신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시도였다.

점묘파의 대표적인 작품은 단연 조르주 쇠라 (George Seurat)의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랑 자트는 센강에 있는 섬으로 파리 시민들의 여름철 휴식처이다. 일요일 오후 햇빛 쏟아지는 강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려있다.

그림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보면 색채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형태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고 색채가 어둡거려서 어지러운 정도다. 사실 이 그림은 윤곽을 그리거나 면을 칠하지 않고 원색의 무수한 점을 찍어서 그린 점묘파(Pointillism) 기법에 의한 그림이다.

점묘파의 그림은 독립적인 색감을 가진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며, 이 점들이 조화롭게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이루듯이 경쟁적 시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독립적인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의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점묘파의 그림은 독립적인 색감을 가진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며, 이 점들은 하나의 원자(Atom)와 같은 존재들인데 이 점들이 조화롭게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이루듯이 경쟁적 시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독립적인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의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치 쇠라의 그림에서 한 개의 독립된 점 자체가 그림 전체의 모습이나 전반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경쟁시장 안에서의 기업의 존재란 마치 원자와 같은 조직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점묘파 화가들의 그림 속에서 그들이 그렸던 한 점 한 점의 존재가 바로 경쟁적 시장 안에서의 기업의 존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르세 미술관에서 시냐크(Paul Signac)과 쇠라의 그림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다. 다시 말하자면 점묘파 화가에 있어서 하나의 색을 가진 점이란 자본주의 시장에서 하나의 기업에 비유될 수 있다.

점묘파의 그림을 볼 때도 이 같은 완전경쟁시장의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점묘파 화법의 점 하나 하나는 그저 그 점 자체가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미시적 구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점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그림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감이 생기게 되고 화가가 의도한 내면적 예술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균형 상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균형 상태는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공공의 선(Public Good)을 이룬다. 애덤 스

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사회 전체적인 균형상태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것은 마치 점묘파 그림에서 수많은 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균형상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왜 점묘파의 화가들은 무수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 것일까? 그 이유를 색채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물감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 그런데 여러 개의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차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은 태양 아래 밝은 자연의 풍경을 그릴 때 그림물감을 되도록 섞지 않으려고 하였다. 점묘파의 화법은 인상파 화가들의 이러한 우려를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수법이 되었다. 이 방법을 쓰면 조금 떨어져서 보면 한 가지 색으로 보이는데 물감을 섞은 경우와는 달리 색의 밝기가 그대로 화면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는 점묘법의 효과는 화폭이 클수록 극대화된다는 점을 깨닫고 이 그림을 거대한 화폭에 담았다. 그랑 자트의 공원을 다양한 색채와 빛, 그리고 형태들을 점묘 화법을 통해 꼼꼼하게 그렸고 이 풍경은 관객을 압도한다.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2년이나 걸렸다.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른쪽에 보이는 검은 양산의 여인을 보면 손에는 가죽 끈에 묶여 있는 원숭이가 있는데 당시 원숭이는 매춘이나 성적 욕망을 의미했기 때문에 매춘하는 여성을 암시하는 듯하다. 또한 붉은 양산을 쓴 여인과 함께 걸어오는 하얀 드레스의 소녀는 그림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혼자 반짝거리는 듯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꼬마 아가씨의 하얀 원피스만 점묘화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1891년 32세의 이른 나이에 죽을 때까지 작가의 수중에 남겨져 있었다. 동료 화가 폴 시냐크는 쇠라가 죽고 난후 그의 큰 그림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했다. 미술관에 증여하고자 해도 도대체 어느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받으려 할 것인가? 그러나 그의 걱정은 기우였다. 이 작품은 미국의 사업가가 2만 달러에 구입해서 바로 시카고 미술관(Art Institute of Chicago)에 기증하였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된 프랑스는 구매가의 20배가 넘는 40만 달러라는 거금을 제시하고 재구매를 요청했지만 시카고 미술관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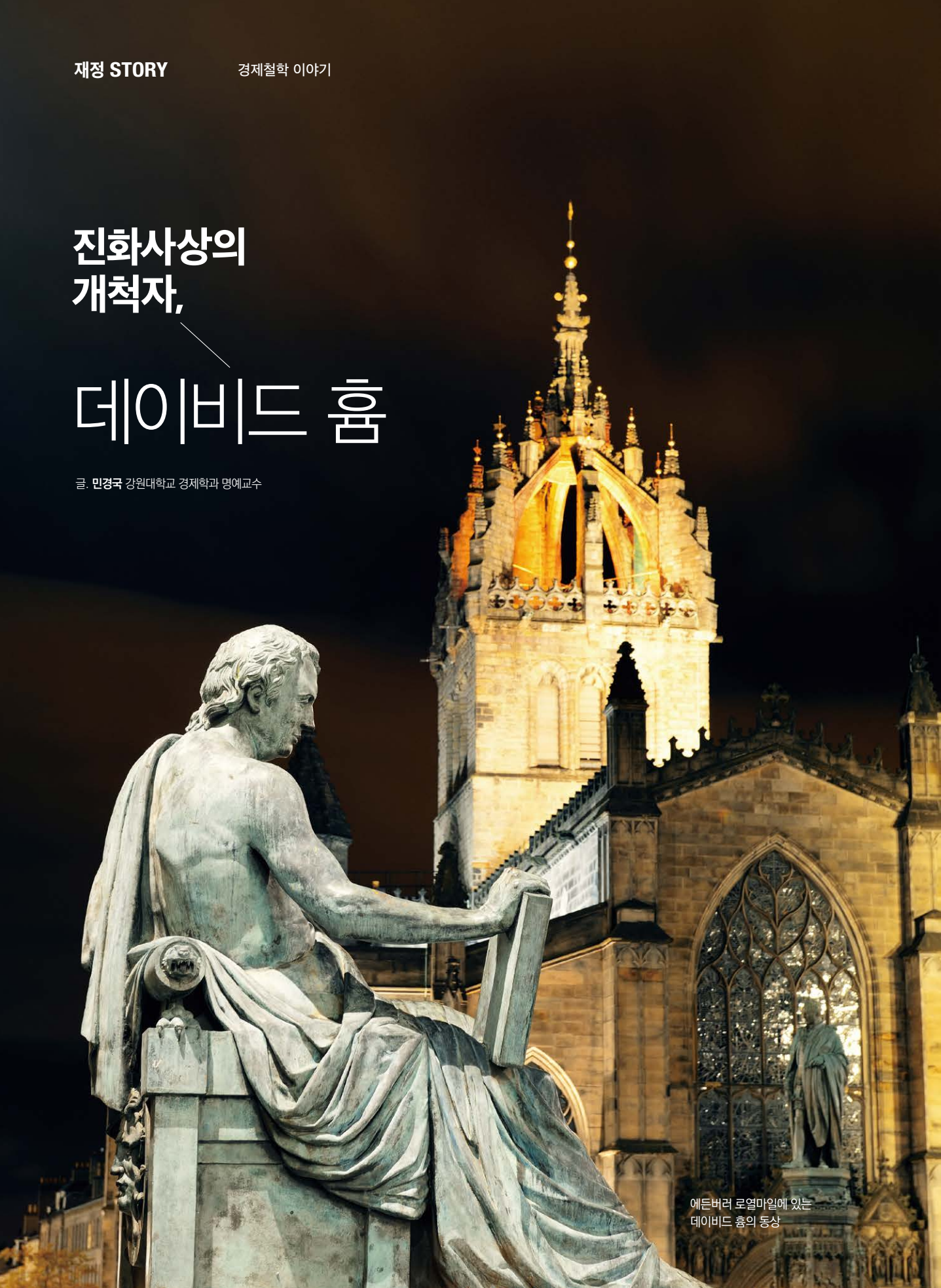
이 그림은 그 후 유명세를 타고 지금은 여러 매체나 잡지 등에서 패러디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만화 <심슨 가족(The Simpsons)>의 패러디 그림일 것이다. 또한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뮤지컬도 만들어졌는데 뮤지컬의 거장 스티븐 손하임(Steven Sondheim)이 곡을 쓴 <쥘리와 함께 한 일요일 공원(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이다. 일요일 오후 한강변에 나가서 이 뮤지컬을 들어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아마 버나뎃 피터스(Bernadette Peters)의 멋진 목소리로 한 곡 듣기도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

진화사상의
개척자,

데이비드 흄

글.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에든버러 로열마일에 있는
데이비드 흄의 동상



David H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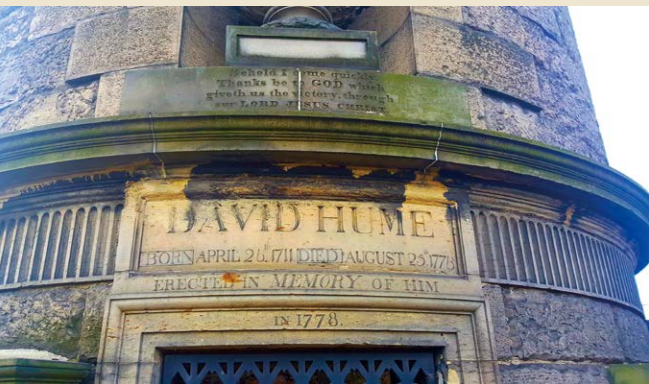
18세기 지식인들이 고민했던 것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도덕과 법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켜지는가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가장 체계적이고 적실성이 있도록 자유주의 철학을 개발한 인물이 영국의 도덕철학자 데이비드 흄(1711~1776)이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초가 되는 정의였다. 그에 게 정의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 계약위반 사기나 기만 등, 불의(不義)를 금지하는 규칙들이다. 사법(私法)의 기초가 되는 정의 규칙은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 주목할 것은 정의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의 문제다.

흄은 당시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의 창조설을 반대했다.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였다. 교수직에 어울리는 인물이었지만 끝내 교수가 되지 못하고 '문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래서였다. 그는 합리주의 사상에도 정면으로 도전했다. 사회의 법과 도덕은 전지전능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설계된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만들어야 합리적이라는 계획사상도 반대했다. 흄은 인간이성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졌다. 정의는 본능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덕은 신의 선물도 이성의 선물도 아닌 진화의 산물

그렇다면 정의의 원천은 무엇인가! 철학적 집필을 16세에 시작했을 정도로 조숙한 흄의 대답은 경험을 중시하는 진화다. 그의 진화사상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것만큼이나 혁명적 발상이었다. 진화의 간단한 예를 들면 어느 한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고 그와 교환을 했더니 두 사람 모두가 더욱 편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왜 유익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타인들도 교환행위를 모방한다. 그 결과, 의도치 않게 재산존중의 도덕이 형성된다는 것이 흄의 설명이다. 언어 시장, 분업 등도 진화적으로 즉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게 흄의 진화론적 주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규칙을 지킨다면 그런 규칙을 강제로 집행할 정부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이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게 유익하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동물이라는 게 흄의 인간관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의의 시스템을 유지하여 재산과 자유를 보호할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통치자가 적절히 법을 집행하여 시



데이비드 흠의 초상(위)
에든버러의 위치한
데이비드 흠의 무덤(아래)

민사회를 유지한다면 군주는 공화정이든 그 혼합이든 상관없다는 게 흠의 헌법적 발상이다. 흠은 진화사상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기초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사상을 개발하는데 개척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경제의 도덕성

상업사회는 부도덕하고 물질주의적 성향을 촉진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상업사회는 물질적 발전만이 아니라 공정성, 사회성, 공손함, 창의와 인간성과 같은 사회적 덕을 증진한다는 것이 흠의 인식이었다. 상업사회는 인간행복의 정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도덕심을 북돋아준다고 한다. 행복은 인간의 최대 목적인데 예술이 고안되고 과학이 생겨나고 법이 등장하는 것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이 흠의 통찰이다. 노동은 성취감을 촉진하고 개인의 성품과 태도를 정제하여 행복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의와 창조를 촉진하고 술주정이나 게으름 등과 같은 파괴적 성향을 억제하는 것이 노동이라는 그의 노동관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도덕과 사회통합의 위협이라는 이유로 상업사회의 개인주의 정신, 경쟁, 이윤추구를 우려했지만 흠은 걱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경제적 번영이야말로 사회적 덕성의 증진에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노동과 지식 그리고 인간성은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이 상업사회라는 것이다. 그는 평등분배에는 관심도 없었다. 국가권력을 증대시키고 과도한 조세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귀족·봉건사회처럼 극단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도 그는 일침을 가한다. 부가 소수의 손에 장악되면 그들이 모든 권력을 손

통치자가 적절히 법을 집행하여 시민사회를 유지한다면
 군주든 공화정이든 그 혼합이든 상관이 없다는 게 흠의 헌법적 발상이다.
 흠은 진화사상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기초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사상을 개발하는데
 개척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에 쥐고 특히 공모하여 조세부담을 빈자에게 전담시켜 결국 빈자들의 노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한다. 다행스럽게도 상업사회는 가장 극단적인 불평등을 견제하여 공정성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흠의 탁월한 인식이었다. 상업사회는 보편적 풍요를 불러온다. 국경을 넘어서까지 상업을 확대한 국제무역이야말로 인류의 문명의 백미라고 그는 목소릴 높였다. 무역은 상품교환을 넘어서 기술적 지식, 삶의 방식을 배울 소중한 기회를 마련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는다.

흠의 사상이 후세에 미친 영향

시장경제는 어떤 특수계층의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한계가 있는 평범한 인간들의 활동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결과라는 게 흠의 핵심사상이다. 그의 사상이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는 인간이성에 대한 회의(懷疑)를 특징으로 하는 진화사상을 개발하여 그가 낳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성인 애덤 스미스와 함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전통을 세웠다. 이 계몽주의는 대륙의 오랜 전통인 ‘프랑스 계몽주의’와 나란히 사회철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한다.

프랑스 계몽주의는 도덕법 등 인간들에게 유익한 사회구조는 인간 이성을 통한 계획의 산물이고 또 계획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인데 흠은 그런 합리주의 사상은 국가가 개인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주의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그 극단이 사회주의다.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어떤 권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연권 이론도 틀렸다는 흠의 주장도 진지하게 되새겨야 한다.

다양한 생물들이 제각기 자신의 생명유지에 몰입한다고 해도 어떻게 자연적으로 질서가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이론에 영향을 미친 것도 흠의 진화사상이다. 20세기 위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였던 하이에크 사상도 흠의 진화사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공공부채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흠의 주장은 공공부채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케인스와 루스벨트의 적자지출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논리였다는 것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흠의 사상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범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영국, 미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잘살게 된 것도 흠의 사상적 영향의 결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시장, 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눈 - 시장경제를 알면 보이는 것들

01

지은이

김재수

- 김재수 저자는 인디애나 퍼듀대학교(IUPUI) 경제학과 교수로 미시경제학, 가격과 시장 이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 다른 저서 〈99%를 위한 경제학〉은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와 '책 전문가 45인이 뽑은 올해의 출판도서(조선일보)'로 선정되었다.

출판사 샘터사

발간일 2020년 2월 25일

66

관점을 바꾸는 시장경제에 대한 질문들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방식은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점을 바꾸는 시장경제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따라가면 우리가 품고 있는 의문이나 놓치고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왜 몸과 마음이 병들 정도로 입시 경쟁을 펼칠까?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을 독점기업에서 비싸게 살까? 일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을까? 무역은 모두를 행복하게 할까? 왜 결혼과 출산을 미룰까?'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관점을 배울 수 있다. 경제학자 김재수 교수는 '시장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답한다. 균형 있게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균형 있는 관점이란 무조건 중립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측면을 모두 살피고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를 꼼꼼하게 따지는 자세이다. 이 책은 균형, 한계, 최적, 외부효과 등 경제학의 연장통으로 현상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 너머의 경제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준다.

여는 글

어려운 질문에 쉬운 대답은 없다

제1장 경제학적 사고방식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

제2장 시장경제 앞에서 보기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
경제 성장, 노동, 무역, 최저임금제 등

제3장 시장경제 뒤에서 보기

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
독점과 정실자본주의, 외부성과 공공재, 불평등 등

닫는 글

시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설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02

지은이
박지훈

- 박지훈 저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해오며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복지영역의 실무를 담당해왔다.

출판사 북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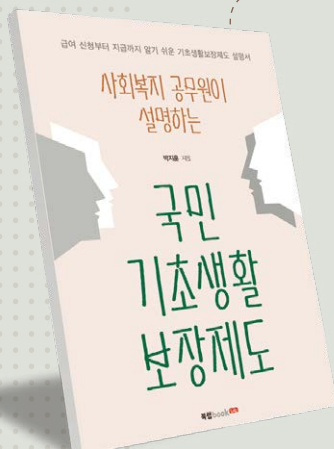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KPFIS's
library

66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것을 다룬 대화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는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난무한다.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원리에서 운영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는 비단 보장받는 계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라도 보기 쉽게 정리된 자료가 없어 배우기가 어렵다. 저자는 신입 공무원 시절 겪었던 우여곡절을 밑바탕으로 하여 14년간 복지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책 안에 담아냈다. 이 책은 어려운 용어와 규칙을 도식화하고 텍스트를 보완하는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해를 돕는다. 또한, 저자와 홍길동(가상의 인물)의 대화문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내고, 틈틈이 그림 설명이 곁들여져 더욱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제1장~제2장 사회복지 이름 구분하기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제3장 상식깨기

알아야돼야 할 상식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첫 만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제5장~제10장 선정 6단계

보장가구 범위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까지

제11장 좋아, 이제 어떤 급여를 받는 거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제12장 대상으로 선정되면, 언제까지 지원 받는 거야?

선정 이후

Financial Calendar



January 01

-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 경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August 08

- 경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0

□ 2019년 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기획재정부, 2.20.)

- 2019년 말 대외채무는 4,670억불로 전년 말 대비 258억불 증가, 대외채권은 9,476억불로 전년 말 대비 288억불 증가하였으며, 순대외채권은 4,806억불로 전년 말 대비 30억불 증가

□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발표(통계청, 2.20.)

-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은 각각 3.6%, 3.3%를 보이며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1분위를 중심으로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5분위 배율은 5.26배로 전년동분기 대비 0.21배p 하락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화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정부, 3.5.)

- 정부는 최근 지역사회 전파(확진자 급증)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8.5조원의 세출 확대 및 3.2조원의 세입 경정을 담은 약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국회 제출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감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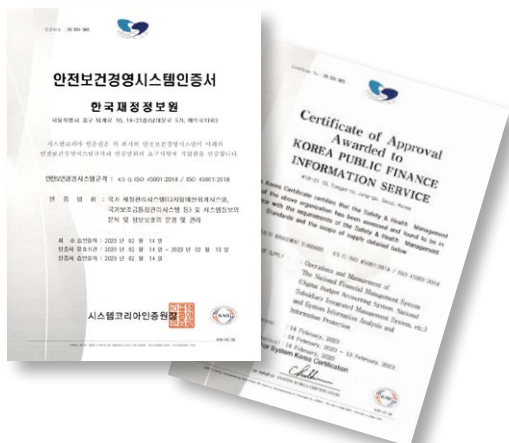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 획득

한국재정정보원은 2월 14일(금)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한 위험요인을 25개 항목별로 파악·관리·개선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국제인증이다. 인증평가에서는 특히 기관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의 안전활동참여와 안전조치 등을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안전경영추진단을 구성하고, 노동조합이나 협력 업체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안전 안건을 심의 및 협의해 왔다. 또한 부서별로 안전지킴이를 지정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벌여 위험요인 21건을 개선한 바 있다.



국유재산 해설서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 발간

한국재정정보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공동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에서는 대한민국 캐릭터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규모와 종류를 소개하고,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임대·매입 방법과 절차와 같이 실용적인 내용들도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국유재산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우수 관리사례, 관련 제도 및 현황 등의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정보를 담고있는 발간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본 발간물을 정보원 및 e나라재산(국유재산 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민원실에도 배포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20. 3. 19. ~ 2020. 4. 7.

문 제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해둔 돈을
일컫는 용어는?

2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e나라재산

☆ 상품 당첨자

ddd****@naver.com
pig****@msn.com
stp*****@gmail.com
cht*****@naver.com
rla*****@naver.com
mar****@koenergy.kr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CARD



평소 국가재정의 쓰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월간 나라재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특히 국내외 재정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와 재정캘린더가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제공 부탁드립니다~

ddd****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